



사진 출처: Myanmar Now

미안마 시위대, 경찰에 살해당하다

관련 기사 12면

서울시장 보궐선거,
윤석열 반란

2~3면

미안마 시위대,
경찰에 살해당하다
정당방위 무장을 해야

12면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살펴보는
코로나 위기로 악화된
여성의 삶

4면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10년
안전하고 평화적인
핵 에너지는 없다

8, 9면

도덕적 공포와
형사처벌 강화로
아동학대 줄지 않는다

11면

서평 《계급이란 무엇인가?》
불평등의 핵심
계급에 대한 이해를
돕고 오해를 풀다

10면

한진택배
노동자 투쟁

12면

서울시장 보궐선거

별 볼 일 없는 도진개진 주류 후보들

박영선: 친서민 개혁과 거리가 먼 중도 줄타기

김지윤

3월 1일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박영선이 확정됐다.

박영선은 최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을 지낸 문재인 정부의 주요 인물 중 하나다. MBC 기자 출신으로 2004년 열린우리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후 3선을 하며 당 최고 위원, 원내대표, 문재인 중앙선거대책위 공동위원장을 맡았었다.

박영선은 2014년 원내대표 시절 세월호 유가족들의 뒤통수를 두 번이나 쳤다. 세월호 운동의 핵심 요구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진상규명위 구성’인데도 유가족들 앞에서 기소권은 요구할 수 없다고 외치더니, 기어코 당시 여당 새누리당(현 국민의힘)과 수사권마저 빠진 특별법에 합의했다. 결국 그해 11월 유가족들의 항의에도 누더기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당시 민주당은 “제2 여당”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였다. 박영선은 1년 뒤 출판한 책《누가 지도자인가》에서 2차(최종) 합의안에 “침묵하는 다수가 찬성했”고, 진상 규명을 위한 선택이었다고 변명했다.

박영선은 원내대표 시절에도 박근혜 경선 캠프에서 정치발전위원으로 활동한 이상돈을 비대위원장으로 영입하려 했다. “국민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반대진영의 사람도 포용할 줄 아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진보진영 선배”들의 조언이 있었다면서 말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박영선은 통합 정부추진위원장이 돼 박근혜 정부·여당에 몸 담았다가 탈당한 인물들도 내각에 임명될 수 있다고 손을 내밀었다. 사법개혁위원장 시절에 사법 농단 법관 탄핵에 미온적이었던 것이나 공수처 설치 등에 열성이었던 것도 ‘개혁’에 알맹이가 없음을 보여 준다.

누구를 위한 ‘개혁’?

박영선은 경제민주화와 재벌 개혁을 강조해 왔다고 내세운다. 그러나 박영선의 개혁은 노동자들의 편에 서서 기업의 양보를 강제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 박영선의 개혁이 뜻하는 바는 한국 자본주의의 생산성과 성장 동력 제고를 위해 재벌이 문어발식 확장은 하지 말고, 중소기업도 경쟁에 끼게 해서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박영선은 자기 책에서 안철수를 호평하며 “30대 대기업이 판단을 잘못하면 대한민국 경제가 휘청이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는 성장하기 어렵다는 것이 나의 소신”이라거나 “공정한 경쟁,” “공정한 기업생태계”를 말했다. 장관이 되고서는 “중소기업 상생이 재벌 개혁”이라고 했다.



장관 재임 중에 박영선이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 운운하고, 주 52시간 제에 따른 사용자들의 부담을 덜어 주려고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늘리자고 주장한 것은 이런 “소신”의 반영이다. 지난해 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서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50인 미만 사업장 법 적용 3년 유예 등 문제적 조항들이 추가된 데에는 중기부의 압력이 작용했다.

박영선은 데이터3법을 적극 지지했는데, 이것은 개인정보 보호 규제를 완화해 정보를 기업들이 사고팔 수 있도록 한 악법으로 당시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박용만이 이 법안 통과에 “탄세”를 외쳤다. 이번에 박영선이 주요 공약으로 내놓은 ‘원스톱 헬스케어’는 이 법을 기반으로 한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 공약이 ‘의료 민영화’라면서 정작 코로나19로 그 필요성이 부각된 공공의료 확충 대책은 쏙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박영선은 삼성 저격수로 알려져 있지만, 2015년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삼성에게 유리하도록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안을 썼다. 개정안은 ‘삼성 방어법’이라고 불렸고, 보수 언론들은 박영선을 “삼성의 수호천사”라고 불렀다.

박영선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공약 파기에 침묵하다가, 선거에 나와서야 문재인 정부와 원팀으로 반값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한다. 정작 자신은 부동산 자산 규모가 32억원(2020년 3월 기준)에 달하고 덕분에 2019년 한 해에만 재산을 10억 원 불렀다.

최근 박영선은 ‘차별금지법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과거 개신교 행사에서 했던 동성애 혐오 발언을 선거 앞두고 지우려는 것이다. 그러나 발언에 대한 사과도 없었고, 막상 차별금지법에 찬성한다고도 하지 않았다. 정점이 된 퀴어퍼레이드 서울광장 개최 찬반 여부도 침묵 중이다.

박영선의 선거 핵심 구호는 “대 전환”이다. 그러나 실질적인 전환은 없다. 한다 해도 그 방향이 노동자와 서민의 이익으로 향하지 않을 것임을 최근까지의 행보가 보여 주고 있다.



안철수: 기회주의적인 시장주의자

김승주

국민의당 안철수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야권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다.

안철수가 2012년 대선을 앞두고는 문재인과 단일화를 다룬 이후로 주요 선거에서 당선 유력 주자로 주목받는 것은 간만의 일이다.

당시 안철수는 ‘정치 혁신’을 외쳤고 “역사의 물결을 거스르는 것은 현실 집권 세력”이라며 이명박 정부를 비판해 ‘안철수 신드롬’이라는 말이 등장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한때 박원순·문재인과 단일화를 겨루던 안철수는 이제 국민의 힘과의 반문재인 우파 단일화 협상을 하고 있다. 심지어 입당 또는 합당(국민의힘 당대표 김중권이 내세운 조건)까지 열어 두고 있다.

2012년 이후 안철수의 행보는 갈지자를 그었고, 그가 주류 여·야 정당 출신이 아니라는 점 말고는 쓸 만하고 새로운 알맹이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인기도 금세 사그라들었다.

2014년 민주당과 합당해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를 맡아 원내대표이던 박영선과 호흡을 맞췄다. 바로 이 시기에 세월호특별법 야합이 일어났다.

2015년 안철수는 문재인과 결별하고 국민의당을 창당했다. 국민의당은 박근혜 정부 하에서 민주당이 별 볼 일 없었던 것의 반사이익을 얻어 민주당의 텃밭이던 호남 지역에서 의석을 대거 확보했다.

그러나 안철수가 대변하려고 했던 층은 민주당과 겹치는 중도층과 그 오른쪽이었다. 그래서 결국 2017년 대선에서 안철수는 3위에 그쳤다. 2016년 10월 안철수는 박원순·문재인보다 먼저 박근혜 퇴진을



요구했지만, 막상 대통령 선거에서는 문재인과의 차별점으로 “촛불 집회에도, 태극기 집회에도 참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꼽았다.

이후 안철수는 꾸준히 오른쪽으로 이동했다. 박근혜 탄핵의 여파로 새누리당에서 쫓겨져 나온 비박계(바른정당)와 합당해 바른미래당을 창당했고, 2018년 4월에는 문재인 정부를 우파적으로 비판하며 서울시장 선거에 도전했지만 낙선했다. 이때의 타격으로 안철수는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 성찰하겠다”고 선언했었다.

그러나 20대 총선을 앞두고 안철수는 다시 국민의당을 창당했다. 문재인 정부가 조국 사태 이후 인기를 잃은 데다가,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당시 원내대표가 나경원이었다)도 ‘태극기 부대’로 상징되는 강경우파 지지층의 도움을 얻어 재기하려다가 역풍을 맞아 무당층이 늘어나면서 안철수가 노릴 정치적 공백이 생겼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

안철수는 모호함을 무기 삼아 기회주의적인 행보를 해 왔지만, 중요한 쟁점들에서 늘 친기업 신자유주의적 입장을 폈다.

안철수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지

말아야 투자가 늘고 경제가 성장한다는 신자유주의 우파 담론을 신봉한다. 국가가 직접적인 경제 개입을 줄이면서도 기업이 잘되도록 지원하면 경제가 잘 풀리고 결국 모두가 잘 살 수 있다는 것이 안철수의 일관된 신조다.

2012년 대선 때 이미 안철수는 보편적 복지 도입에 비판적이었다. 복지 재원은 “중하위층이 함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부자 증세도 반대했다. 정리하고 금지, 파견법 폐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등도 반대했다. 그러면서 국방비는 늘리겠다고 했고 제주해군기지 건설도 찬성했다(이후에는 사드 배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도 찬성했다).

2017년 대선 때 (이후 지켜지지 않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공약을 “국가부도행 특급열차”라고 비난했다. 대신에 안철수는 “공공부문 직무형 정규직 일자리”를 내놓았는데 ‘직무’의 수준이나 변동에 따라 급여와 해고 여부가 결정되는 불안정 일자리였다.

또, 법인세, 부동산 보유세, 상속증여세 등 부자 증세에는 반대하고, 규제프리존에 찬성했다.

안철수가 철저한 시장주의자라는 사실에는 그 자신이 성공한 기업인으로 1퍼센트 부유층이라는 점을 무시할 수 없다. 안철수는 처음에 ‘착한 기업인’으로 주목받았지만 2012년 대선 전에 안철수의 안락은 5년 동안 매출 총액의 고작 0.02퍼센트만을 기부금에 썼을 뿐이다. 안철수의 재산은 2017년 대선 때 1197억 원으로 대선 후보 중에서 압도적으로 많았다.

또, “대기업 독식주의”를 비판했지만 그 자신은 2005~2011년 포스코 사외 이사로 거수기 노릇을 하며 3억 8000만 원을 보수로 챙겼다. 스톡옵션을 팔아 4억 원의 차이도 얻었다.

나경원: 부패한 엘리트 출신 기회주의적 우파

김승주

3월 1일 금태섭과의 ‘제3 지대’ 단일화를 마친 안철수는 곧장 국민의힘을 향해 빠른 단일화를 촉구하고 있다. 안철수와 국민의당은 인지도에 비해 지역 조직은 약해서 국민의힘의 조직력이 필요하다.

제1 야당이지만 후보 경쟁력이 떨어지는 국민의힘도 일단 문재인 정부를 약화시켜야 내년 집권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안철수와 의 단일화가 필요하다.

국민의힘 후보가 될 것으로 보이는 나경원도 (안철수처럼) 서울시장 선거 재수생인데, 원내대표이던 2020년에 당시 당대표 황교안과 함께 짙은 강경보수색을 드러내며 20대 총선을 이끌었다가 역풍을 일으키고 참패한 여파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다.

오세훈은 2011년 무상급식을 막겠다고 오버하다가 실패하고 시장직을 사퇴해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돼 왔다.

선거일이 다가오자 최근 나경원은 중도로의 확장성을 강조하고 있다. 사실 1월만 해도 나경원은 “우파 짜장”(정통 보수를 뜻함)을 자처했다. 그러나 단일화 상대인 안철수 지지율을 따라잡지 못하고, 가상 양자 대결 조사에서 민주당 박영선에게 지는 결과가 계속 나오자 한 달 만에 방향을 튼 것이다. 당내에서도 ‘강경보수로 는 민주당을 이기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결국 나경원은 2월 들어서 노무현 정부 시절 정보통신부 장관을 지냈던 ‘친노’ 진대제를 영입하고, 금태섭과 조정훈(민주당의 위성비례정당이었던 ‘시대전환’ 소속)까지 아우르고 싶다고 말했다. 온건 우파를 자처해 온 유승민도 “나경원은 강경보수가 아니다” 하고 지원사격해 줬다.

문재인 정부의 턱없이 부족한 재난 지원금 정책 등을 놓고 “퍼 주기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던니, 이번에는 서울에서 결혼하고 출산하면 1억 원 이상의 대출 이자를 지원하겠다는 복지 공약을 내놓기도 했다.

부자 엘리트 본색

나경원은 사학재벌 집안에서 태어나 판사를 거친 부자 엘리트 출신이다. 2002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였던 이회창에게 발탁돼 정치 인생을 시작했고, 2007년에는 이명박 대선 캠프에서 BBK 의혹을 필사적으로 방어한 대변인으로 활약했다.

나경원은 2008년 총선에서 서울

중구 국회의원, 2011년 한나라당 최고위원을 지내는 등 승승장구하는 듯했다. 그러나 2011년 박원순에게 패했던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자기 집안의 사학재단 비리가 불거지는 등 타격을 받았다.

특권층 의혹이 늘 따라다닌다. 최근에는 고교생이던 아들이 서울대 실험실을 사용하는 특혜를 누렸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최근 수감하기 어려운 이유들로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났지만 특혜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딸의 성신여대 입학·성적 특혜 의혹도 속시원하게 풀린 것은 아니다.

나경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마땅한 대안이 없던 친박계의 지원을 받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됐다. 박근혜 탄핵에 찬성표를 던졌지만 탈당은 하지 않은 덕분이었다. 나경원은 당시 탈당파의 새 당에 지도부 직책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탈당파를 따라가지 않았다.

당대표 황교안과의 투톱 체제로 당을 이끌면서 “문재인은 김정은 수석대변인,” “주사파 정권” 등 색깔론을 서슴지 않는 강경우파 본색을 확 드러냈다. 선거제 개혁 패스트트랙을 막겠다고 ‘빠루’를 들고 국회 난동극을 주도하기도 했다. 그 결과는 20대 총선 완패였다.

지금 나경원은 전통적 보수 지지층과 중도 확장성 사이에서 오락가락하고 있다. 이러한 기회주의적 행보는 박근혜 탄핵 이후를 온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우파의 딜레마를 보여 준다.

문재인의 레임덕을 보여 주는 윤석열 반란

김문성

이틀(3월 2~3일) 연속 이어진 검찰총장 윤석열의 언론 인터뷰와 그에 대한 청와대의 반응은 지금 문재인 정부의 상태를 보여 주는 듯하다.

윤석열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을 <국민일보>와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전면 반박하며 강도 높게 여권을 비판했다.

“[검찰 수사권이 박탈되면]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법치를 말살하는 것이며 헌법 정신을 파괴하는 것이고[<국민일보>], “권력 있는, 세도 있는 사람들은 치외법권이 생기고 사회가 급격히 수구화된다.”(<중앙일보>) “[검찰이 부패한 권력자들을 벌해서 힘없는 사람들이 숨 쉴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 민주주의가 내실화되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이다.”(<중앙일보>)

이 인터뷰로, 특권층 수사로 국민적 지지를 받았던 윤석열의 반부패 정치가 부각됐다. 그는 수사권·기소권을 다 보유해야(“융합”) 권력자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부패 수사 조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검찰을 쪼개는 것은 진정한 정점이 아니라는 것이다.

수사권·기소권을 모두 보유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만든 민주당이 수사권·기소권 분리가 국제적 추세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다. 친정부 인물인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운의 수사 개입 의혹은 3월 2일 공수처로 넘어갔다. 친정부 인사 보호에 공수처가 이용될 것이라는 비판이 진작부터 있었다.

청-검 갈등

한편, 검찰 수사권 박탈 법안을 발의한 의원 명단에는 조국 아들의 허위 스펙 증명서를 발급해 1심에서 의원직 박탈형이 선고된 최강욱,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건으로 수사 대상(피의자)이 된 황운하(선거 당시 울산경찰청장) 등이 있다.

여권의 이런 모순 때문에 ‘검찰 개혁’에 대한 대중적 지지는 크게 약화됐다.

그러나 윤석열의 대안도 결국 부패 수사를 전담할 검찰2, 검찰3을 만들자는 것으로, 진정한 개혁은 아니다. 권력형 부패의 수사를 방해하는 정권은 비판해야 하지만, 현 상태에서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 어느 정부든 권력 핵심부는 여전히 수사를 방해할 수 있을 테고, 인적·조직구조적으로 서로 연결된 권력기관의 권력층 수사는 한계가 명백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행정부 소속 고위 관료가 정부를 이토록 강경하게 비판하는 것을 보면, 1년 넘게 이어진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이 끝판에 이른 느낌이다.

그러나 청와대의 반박은 예상보다 온건했다. “검찰은 국회를 존중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차분히 의견을 개진해야 할 것이다.” 3월 3일 국무총리 정세균도 윤석열을 비판했으나 수위는 낮



다. “[인터뷰] 하는 걸 보면 정치인 같다. 그냥 평범한 행정가나 공직자의 발언 같지 않다.”.

문재인이 윤석열 징계·제거에 직접 나섰다 실패한 뒤로는 윤석열과 직접 충돌하는 건 부담이 클 것이다. 특히, 바로 얼마 전에 (검찰 관리를 담당하는) 청와대 민정수석 신현수의 사퇴 소동으로 정권 핵심부 안에 검찰 문제로 분열이 있음이 드러났다.

이후 민주당과 친문 강경파 의원들이 신현수를 공개 비판하며 ‘검수완박’ 입법에 나선 것과 달리 청와대는 아직 신현수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청와대의 비판은 책임을 민주당에게 넘기는 것으로도 들린다. 이는 책임 회피일 수도 있지만, 여권 내 강경파를 더는 통제하기 어렵다는 레임덕 징후일 수도 있다.

격세지감

윤석열 제거 실패가 문재인의 정치적 위기를 앞당긴 결과, 통치력 누수 현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최근 부산 가덕도 신공항 문제로 국토교통부가 정권 핵심부에 반하는 보고서를 유출하자, 문재인이 직접 그 공무원들을 비판해야 했다. 행정부 안에서 이반 행위가 벌어진 것이다.

그러자 문재인은 2월 25일 직접 부산을 방문해 울산시장 송철호, 경남지사 김경수와 민주당 당대표 이낙연을 대동하고서 “동남권 메가시티” 운운하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통과를 독려했다. 다음날 특별법이 통과됐지만, 부산 지역 여론조사에서는 여권이 기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여전히 대선 주자 2, 3위권을 유지하는 윤석열이 정권 핵심부를 정면 비판한 것이다. 검찰 압박의 속도와 강도를 놓고 여권의 내분이 더 첨예해질 수도 있다.

현재의 정치 위기 때문에 여권의 재·보선 전망은 밝지 않다. 2018년 지방선거나 2020년 총선 때 지역구 후보들이 문재인 마케팅에 열을 올리던 것을 생각하면 격세지감이다.

그동안 문재인은 위기일 때 진보진영에 손을 내밀어 왔지만, 진정한 발걸음은 지배계급의 지지를 구하는 방향으로 움직였다. 올 상반기도 그러할 것이다.

안철수·나경원 부동산 대책: 문재인과 다를 바 없다

김승주

안철수와 나경원은 서울시장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인 부동산 정책을 놓고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격하게 비판한다.

특히 안철수는 “문재인 정부의 가장 ‘폭망’한 정책은 24타수 무안타 부동산 정책”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시장을 무시”하고 “규제로 부동산 시장을 엉망으로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이유는 말로 공공성 운운한 것과 달리 시장

주의에 의존해 투기판이 돼 버린 주택 시장을 제대로 규제·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안철수와 나경원이 내놓은 재개발 규제 완화, 부동산 세금 감면(취득세·안철수, 종합부동산세·나경원), 고가주택 기준 완화(재산세 감면)와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은 대안이 되기는커녕 노동자·서민의 고통을 키울 뿐이다.

우파는 문재인 정부의 대안 못 된다

이처럼 안철수와 나경원은 “문재인 정부를 심판하자”고 하지만

심각한 경제 위기 시기에 기업주들의 이익을 우선하는 점에서 더 나쁘면 나빴지 문재인 정부보다 더 나을 것이 없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에 대한 환멸이 커지고 대안이 보이지 않으면, 일부는 (중도)우파에게서 대안을 찾으려 할 수 있다.

주류 양당은 물론 그 사이 어딘가에서 반사이익을 누리려 하는 기회주의자들을 왼쪽에서 선명하게 비판하고, 그럼으로써 문재인 정부에 맞선 투쟁을 고무하는 것이 진정한 대안이다. 그 때야 우파의 부상도 막을 수 있다.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살펴보는

코로나 위기로 악화된 여성의 삶

이현주

코로나19가 노동계급과 서민층 여성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마치 시계가 거꾸로 돌아가는 것만 같다.

많은 노동자와 서민들이 코로나19와 장기 불황으로 타격을 입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여성들은 더 큰 타격을 받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월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98만 2000명가량 감소했는데, 그중 60퍼센트가 여성이었다. 여성 취업자 수(5.2퍼센트 감소)는 남성 취업자(2.5퍼센트 감소)보다 더 큰 폭으로 줄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여성 종사자가 많은 대면 서비스 업종이 큰 타격을 입은 탓이다.

“코로나보다 카드빚, 대출금이 더 무섭다”

아이돌봄 노동자나 가사노동자, 방과후 학교 강사, 요양보호사 등 돌봄·교육 분야에서 일하는 많은 노동자들은, 일감이 줄어 생계에 커다란 어

려움을 겪고 있다.

가장 극단적인 사례로, 방과후강사의 경우 코로나 전보다 소득이 98.8퍼센트 준 것으로 나타났다(김난주 외, ‘코로나19 이후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여성노동자 위기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수입이 그야말로 공중분해된 것이다.

무급휴가, 연차 강요, 임금 삭감 등의 피해도 커졌다.

여성의 일자리, 소득 감소는 여성의 빈곤을 증가로도 이어지고 있다. 2020년 1분기에 여성의 상대적 빈곤율(연소득이 중위소득의 절반 이하인 가구 비율)은 13.55퍼센트로 전년 동기보다 확대됐다.

여성의 평균 보유 자산은 남성보다 적은데, 그러다 보니 여성들은 대개 급격한 소득 손실에도 더 취약한 편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위기에 빠진 이들을 지원하는 데는 매우 인색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생활고를 겪는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했고, 그마저도 1차 이후에는 선별적으로 지급됐다.

이중의 굴레가 강화되다

한편 코로나 위기는 노동계급 여성의 가정 내 무급 노동 부담을 한층 증폭시켰다.

학교와 어린이집, 유치원, 노인·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등이 문을 닫으면서, 교육과 돌봄의 부담 대부분을 가족, 그 중에서도 여성이 감당해야 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 한국궐 럽이 실시한 ‘COVID-19와 한국의 아동 돌봄조사’ 결과를 보면, 코로나 위기로 전업주부의 경우 자녀 돌봄시간이 하루 9시간에서 12시간 38분으로, 맞벌이 여성의 경우에는 하루 5시간에서 6시간 47분으로 늘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면서도 기업의 이윤 손실을 염려해 정작 기업 가동을 멈추려 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맞벌이 부모들은 어린 자녀를 맡길 곳을 찾느라 발을 동동 굴러야

했다. 전담 보모를 구하는 것은 부유층에게는 별 일 아니겠지만 노동계급 가정에게는 엄두를 내기 어려운 일이다.

한부모 가정(대부분이 여성 가정)의 고통은 더 클 것이다. 인천에서 두 형제가 단 둘이 집을 지키다가 변을 당하는 비극도 벌어졌다.

코로나 사태 초기부터 긴급돌봄 서비스가 시행됐지만, 감염과 안전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용률이 매우 낮았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이용률이 늘긴 했지만, 돌봄 공백을 전부 메우지는 못했다.

정부는 가족돌봄휴가 제도도 시행했지만, 기간이 최대 20일(한부모의 경우 25일)로 너무 짧고, 무엇보다 회사의 눈치가 보여서 제도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곳도 공공기관과 몇몇 대기업 등으로 매우 제한적



희생 노동계급·서민층 여성들은 위기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여성 노동은 자본주의 시스템의 핵심적 일부

이었다. 사실, 재택근무를 한다 해도 일하는 동시에 온종일 어린 자녀를 돌보는 것은 아이에 대한 사랑과 무관하게 부모를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완전히 소진시키는 일이다. 좁고 어두운 열악한 주거 조건이라면 고통이 더 클 것이다.

이런 배경에서 양육 부담 증가가 여성의 경력 단절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장애인, 환자, 노인에 대한 돌봄 부담도 노동계급 가족과 여성을 위태로운 상태로 내몰고 있다. 지난해 광주에서는 발달장애인 자녀와 그 어머니가 사회복지시설이 장기 휴관에 돌입하며 가중된 돌봄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끝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처럼 코로나 위기 하에서 자본주의 사회는 노동계급과 서민층 가정(그중에서도 특히 여성)의 희생 증대에 기대서 위태롭게 유지되고 있다.

통해 돌봄 공백을 매우도록 강요받았다.

문재인 정부는 사회서비스공단을 만들어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민간 사업주들의 반발을 의식해 이미 크게 후퇴한 바 있다.

또, 최근 정부는 2025년까지 “공보육 시설 이용률 50퍼센트 달성”을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겠다고 말했지만, 이것도 국가 직영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다.

코로나 위기로 여성들의 일자리 일부가 사라지고 가정 내 부담이 늘긴 했지만, 동시에 코로나 위기는 자본주의가 여성들의 임금노동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도 드러냈다. 교육·보건·돌봄과 같이 사회의 기능 유지를 위해 지속될 필요가 있는 필수 업무 종사자의 다수가 여성들이고, 그 업무의 중요성이 부각된 것이다.

특히 여성은 팬데믹에 대한 보건 분야 대응에서 핵심적인 구실을 하고 있다. 여성은 간호사와 조산사의 85퍼센트를 포함해 전 세계 보건 인력의 3분의 2를 차지하며, 국가의 장기 요양 근로자의 90퍼센트를 차지한다(OECD 2020).

이런 사실은 일부 페미니스트들의 주장과는 달리 여성의 노동이 주변적이지 않고, 자본주의가 운영되는 데서 중요한 일부임을 보여 준다. 그리고 이것은 여성 노동자들이 남성 노동자와 함께 자본주의 체제를 멈출 계급적 힘을 발휘할 위치에 있음을 뜻한다.

최근 초등돌봄전담사나 콜센터 노동자들 등 여성 노동자들은 코로나 위기로 업무의 중요성이 부각된 상황에서 투쟁에 나서기도 했다.

노동계급 여성들의 고통을 완화하려면 노동자들에 대한 해고와 무급 휴직, 임금 삭감 강요 등에 맞서야 한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 대폭 늘어난

시간제 일자리가 아니라 양질의 공공 일자리가 대폭 늘어야 한다. 감염 걱정 없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공립 돌봄·보육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그리고 이 분야 노동자들의 열악하고 불안정한 노동조건이 확실히 개선되고 전일제 인력이 확충돼야 한다. 의료·방역 인력도 확충해 팬데믹 대응의 최전선에서 희생당하는 방역·의료 노동자들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

그러려면 기업주들의 이익과 필요를 우선하며 노동계급 대중의 필요를 희생시켜 온 문재인 정부에 도전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조만간 고용 위기에 처한 여성과 청년 등을 위한 조치를 발표하기로 했는데, 이런 조치도 생색 내기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뿐만 아니라 여성을 옹아매는 이중의 굴레를 해결하려면 그것을 낳는 근본 구조인 자본주의 체제에 맞서야 한다.

3월 8일은 세계 여성 노동자의 날이다. 1908년 미국 뉴욕의 여성 노동자들이 영웅적 투쟁으로 큰 영감을 준 이래 여성 노동자들은 오늘날까지 착취와 차별에 맞선 투쟁에서 언제나 중요한 일부였다.

팬데믹 위기 등 정신나간 자본주의 체제가 고통을 전가하는 오늘날에도 여성 노동자들은 체제의 권력자들에 맞서 싸울 수 있고 그래야 한다.

4차 재난지원금과 고용 대책

선거 앞두고 환심사려 하지만, 턱없이 부족

정선영

3월 2일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과 고용 대책 등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에 19조 5000억 원에 이르는 지원 대책을 냈다고 했다. 그러나 4조 5000억 원은 기존 예산을 일부 변형한 것이기 때문에 추가 지출은 15조 원에 그친다.

이번 대책 발표를 앞두고 민주당은 ‘20조 원 추경’을 말했지만, 균형재정을 중시하는 기획재정부 관료 등의 신자유주의적 우파들과 타협하면서 규모를 줄인 것으로 보인다.

그조차 방역 대책 4조 1000억 원과 고용대책 2조 8000억 원을 제외하면, 4차 재난 지원에 사용되는 돈은 8조 1000억 원뿐이다. 이는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14조 2000억 원)의 절반을 약간 웃도는 수준이다.

정부는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대중의 환심을 사려 하지만 이 정도로는 코로나19와 심각한 불황 속에 고통받는 대중의 불만을 달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는 제한된 재원의 대부분을 소상공인 지원(6조 7000억 원)에 배정했다. 기존보다 지급 대상 소상공인들을 늘리고 액수도 100만~500만 원으로 조금 늘렸다.

물론 이는 심각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일시적인 도움은 되겠지만, 미봉책이라는 사실은 여전하다. 민주당은 손실보상제를 추진한다지만 코로나19로 피해가 극심했던 이제까지의 손실을 보상하지는 않겠다고 하고, 구체적인 지원 방식과 규모도 밝히지 않고 있다. 건물주들의 소유권을 중시하다 보니 ‘착한 임대인’들의 선의에만 기댈 뿐 소상공인들이 요구해 온 임대료 인하 대책도 추진하지 않고 있다.



4차 재난지원금에서 대부분의 노동자는 배제됐다

게다가 대다수 노동자들은 이번 대책에서 완전히 배제됐다.

정부는 특수고용 노동자와 프리랜서 70만 명에게는 50만 원, 신규로 받는 10만 명에게는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250만 명에 이르는 특수고용 노동자의 3분의 1도 되지 않는 수치이다.

고용 대책

이번 발표 전에 문재인은 “특단의 고용 대책”을 내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1월 취업자가 100만 명 감소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최악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청년 확장실업률은 27.2퍼센트로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번에 포함된 고용 대책은 특단의 대책과는 거리가 멀다. 2조 1000억 원을 들여 만든다는 일자리 27만 5000개 중 정부가 인건비 전액을 부담하는 것은 14만 8000개에 불과하다. 이조차 대부분 6개월에서 1년 짜리 단기 저임금 일자리이다. 공공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 81만 개를 만들겠다는 공약은 이미 기억조차 하기 힘

들고, 정작 단기 알바를 늘리는 정책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실업 상황에 놓인 사람들에게 이런 일자리가 없는 것보다는 나을 테지만, 단기 일자리로 실업난에 처한 사람들의 고통을 해결할 수는 없다.

게다가 나머지 일자리 13만 개가량은 고용장려금이나 창업지원사업 등으로 기업주를 지원해 창출하겠다고 한다.

이런 방식은 사실 기업주들에게 혜택이 될 뿐이고, 기껏해야 불확실한 시장 상황과 기업주들의 의지에 일자리

확대를 내맡기는 일이다. 경제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기업주들은 일자리를 늘리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에 운영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6개월 동안 월 최대 180만 원의 인건비를 지급했지만, 이 사업의 예산 집행률은 12퍼센트에 불과했다.

고용유지지원금과 관련해 경영 위기 10개 업종에 휴업·휴직 수당의 3분의 2를 지급했던 것을 90퍼센트 지급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발표했다(24만 2000명, 2033억 원). 그러나 코로나 19와 불황이 길어지면서 위기에 처한 산업들에서 구조조정 위험도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 역시 고용 유지 대책 치고는 너무 부족하다. 고용유지지원금 자체가 기업들의 의사에 따라 신청할 수 있고 제약도 많아 많은 노동자들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져 왔다.

우파와 보수 언론들은 이런 부족한 지원책을 두고도 재정 적자가 커지고 있다며 불평을 쏟아 내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지난해 정부가 기업에 수백조 원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 삼지 않았다. 정부가 제출한 한국판 뉴딜 예산 160조 원도 대부분 기업 지원 예산이었다. 또 정부는 향후 5년간 군비에 300조 원을 쓸 계획이고, 미군에게 주는 방위비 분담금은 무려 13퍼센트나 인상할 것이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면서 노동자·서민에게 가는 알량한 지원책에는 거품을 무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우파들과 차별성을 그으려 하면서도 실 내용은 턱없이 부족한 지원을 하며 노동자·서민을 지원하는 데 인색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정부에 맞서 노동자·서민의 삶을 지키려면 아래로부터 투쟁을 키워 가야 한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재시도

코로나 와중에 의료·공공서비스 영리화

장호중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경제를 앞세우느라 거둬들여야 할 문제에 일관된 바 있다. 이는 수만 명을 추가로 위험에 빠뜨렸고 수백 명을 외로운 죽음에 이르게 했다. 올해 예산에는 공공병원 설립 예산이 단 하나도 포함되지 않았다. 돌봄 노동자들은 감염 위험과 소득 감소의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지만 지원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반면, 정부·여당은 기업주들에게는 엄청난 신용과 재정을 지원한 것으로도 모자라 이 와중에 기업주들을 위한 영리화 법률을 통과시키려 한다.

여야는 2월 25일 국회에서 ‘서비스

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법)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 법안은 이명박 정부 시절 당시 18대 국회에서 한나라당(현 국민의힘)이 발의했지만 반발에 부딪혀 결국 폐기됐다. 이후 19~20대 국회에서도 거둬들여졌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이 법이 공공서비스, 특히 의료 영리화를 가속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

서비스법은 의료법 등 공공서비스에 관한 규제를 담고 있는 수십 개 법률들의 ‘상위법’이다. 따라서 이 법률에서 일부 규제를 완화하면 하위 법령들도 불구하고 상위법의 내용이 효력을 갖는다. 자연스레 하위법의 해당 조항을 개정하는 조처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컨대 의료법에는 영리병원을 금

지하는 조항이 있지만 서비스법이 통과되면 ‘투자 활성화’를 위해 허용할 수 있다. 투자 개방형 학교를 설립하거나 철도를 민영화하는 등 공공서비스 전반에서도 민영화와 규제 완화가 쉬워진다.

이처럼 서비스법은 다른 법률들에 담긴 규제 조항들을 손쉽게 무력화할 수 있는 ‘포괄적 규제 완화’ 법이다.

특히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서비스산업선진화 위원회’가 서비스산업과 관련된 모든 법령의 제·개정에 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자들의 저항이나 특정 부문 자본가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해당 부처 관료들이 개악안 처리에 미온적일 때 이를 강행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신자유주의적 규제 완화 조처의 일환으로 이 법을 제정하려 했다. 규제를 담고 있는 법률들을 일일이 개정하려다 보니 시간도 오래 걸리고 논란이 계속돼 속도가 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문재인과 민주당은 야당일 때에도 이 법률의 취지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았다. 사실 신자유주의적 규제 완화와 공공서비스·의료 영리화에 관해 서라면 김대중·노무현 정부도 이명박·박근혜에 뒤지지 않는다. 다만 야당 시절에 민주당은 의료 영리화 반대 운동 등의 압력을 받아 엉거주춤한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문재인 집권 이후 정부·여당은 일관되게 이 법률 제정에 공을 들

여 왔다. 쌍둥이 법이라 할 만한 규제프리존법은 대통령 문재인이 김정은과 손잡고 백두산에 오른 날에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서비스법 적용 대상에서 의료법 등은 제외하겠다고 야당과 공방을 벌이는 시늉을 하지만, 설사 의료법이 제외되더라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서비스법 적용을 받는 의료 관련 법률만 50여 개가 넘고, 기재부 자신도 그 법률들을 활용해 의료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무상으로 운동본부는 2월 22일 관련 토론회와 기자회견을 열고 서비스법 제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서비스법은 폐기돼야 한다.

램지어 역사 왜곡 망언을 계기로 보다 위안부 문제의 본질은 무엇인가?

김승주

존 마크 램지어 교수는 미국 하버드 대학교 로스쿨 교수로, 일본법 전공자이다. 그리고 알려졌다시피 일본 전범 기업 미쓰비시의 후원을 받아 왔고, 일본 정부와 우익의 입장을 학술적으로 대변해 온 학자다. 램지어 교수는 그 ‘공로’를 인정받아 일본 정부의 훈장도 받았다.

논란이 되고 있는 그의 논문 ‘태평양 전쟁에서의 성매매 계약은 위안부 문제를 법경제학적으로 접근했다고 한다. 그러나 전문을 읽어 보면 1990년대부터 위안부 피해를 부정해 온 일본 우익의 논리를 굽어모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이 논문은 이미 여러 학자와 언론이 비판했듯이, 근거가 부족하고 왜곡투성이에 일부 내용은 출처마저 불분명하다.(익명의 우익 블로그를 참조했다고 한다.)

위안부 피해를 부정하는 핵심 논리 세 가지

램지어의 주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핵심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계약이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대개 “예비 매춘부”로서, 매춘업자와 “상호 이해관계를 충족하는” 자유계약을 맺었다는 것이다.

둘째, 급료와 보수에 관한 것이다. 위안소 생활이 ‘고위험’이었지만 ‘고수입’이 보장됐다는 것이다.

셋째, 위안부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일본 국가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첫째로 언급된 자유계약 주장에서 자연스럽게 파생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선, 램지어 교수는 자유계약의 증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않는다. 램지어 교수가 제시한 “근거”는 1910년대와 1920년대 중국으로 보내진 일본인 위안부의 표준계약서와 일본인 위안부의 사례다.

일본에는 국가가 관리하는 성매매 제도(이른바 “공창 제도”)가 일찍이 존재했고, 군인들의 회고 등에 따르면 1894~1895년 청일전쟁이나

램지어 교수는 게임이론을 들먹인다. 게임이론이란 한 사회의 행위자들이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려는 일정한 전략을 가지고 있어서 각자 최고의 보상을 얻기 위해 거래한다는 극도로 개인주의적인 이론이다.

이 우파적 이론을 위안부 문제에 적용한다는 것은 위안부 피해자들이 위안부 생활에서 얻은 이득이 있었음을 주장한다는 뜻이다.

1999년 출간된 《위안부와 전장의 성》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일본 우익 학자 하타 이쿠히코는 같은 주장을 두고 “[위안부와 매춘업자 사이의 관계는] 상거래의 가는 정, 오는 정”으로 봐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램지어 교수는 하타 이쿠히코를 비롯한 일본 우익들의 글들을 주로 인용했다.

그래서 램지어 교수의 주장을 살펴보는 일은 전통적으로 일본 우익들이 위안부 문제를 어떻게 왜곡해 왔는지를 살펴보는 일과 거의 비슷하다.

1904~1905년 러일전쟁 때 그 제도에 기초한 민간 주도의 군 ‘위안소’가 전쟁터에 존재했다. 램지어는 일본에서 일반적인 매춘부와 달리 전장에 보내진 경우 급료가 더 높았다는 것을 증거로, 1930~1940년대 전쟁터에 보내지기 위해 대거 “모집”된 조선인 위안부도 높은 급료를 받았을 것이라고 일반화한다. 이에 대한 실제 계약서나 사례는 제시하지 않으면서 말이다.

램지어가 비약하는 방식과 달리, 우리는 1910~1920년대 민간이 주도한 일본인 ‘위안소’와 1930~1940년대 일본 국가가 체계적인 계획 하에 식민지 여성들을 강제로 동원한 전쟁범죄를 구분해야 한다. 위안부 문제라고 할 때는 후자를 가리키는 것이다.

또, 일본 국가가 체계적으로 벌인 일이라는 점에서 위안부 문제는 전쟁터에서 벌어지는(성매매는 물론) 일부 병사나 군 부대에 의한 성범죄들과도 구분된다.

이런 구분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지



1944년 중국 포로수용소에서 미군이 찍은 위안부들의 모습

않으면 위안부 문제의 역사적 특수성과 일본 국가의 책임이 흐려지기 때문이다.

한편, 램지어 교수는 딱 한 명의 조선인 위안부의 증언을 제시한다. 바로 고 문옥주 할머니(1924~1996)의 증언이다. 고 문옥주 할머니는 고 김학순 할머니의 최초 증언 이후 두 번째 증언에 나섰던 분이다.

램지어 교수는 문옥주 할머니의 증언 중에 위안소에서 일하면서 군인에게 받은 급료나 팁으로 저축을 하고 시장에 나가 귀금속을 구입했다는 부분을 톡 떼어 내어 인용했다.

《반일 종족주의》를 쓴 뉴라이트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도 이 부분을 인용해 위안부 피해를 부정한 바 있다.

그러나 보편적인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급료나 팁을 받은 사례는 극소수였다. 위안소에는 이용요금 규정이 있었지만 군인들은 돈이 아니라 표로, 그것도 관리자에게 지불했다. 그랬기 때문에 위안부 피해자들이 관리자에게 급료를 제대로 정산받을 수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문옥주 할머니는 일부 군인이나 관리자와의 친분 덕분에 호의(라지만 사실은 호의라고 할 수 없는 돈)를 받은 경우였다. 게다가 문옥주 할머니가 미얀마 전쟁터에서 겨우겨우 모은 우편 저금은 전후에 일본 국가의 재산으로 간주돼 실제로는 할머니 손에 들어오지도 못했다.

무엇보다 강제로 끌고가서 강간과 학대를 가하고 난 뒤 돈을 준다 해서 범죄가 아닌 “자유로운 상거래”가 되는가?

게다가 램지어 교수는 문옥주 할머

니의 증언 중에 자신의 자유계약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부분을 의도적으로 외면했다. 문옥주 할머니의 증언 전체를 보면, 할머니는 16살에 일본 경찰과 헌병에게 강제로 끌려가서 한번, 겨우 풀려나온 뒤 취업 사기로 또 한번 위안부로 살아야 했다. 할머니는 지옥 같은 생활에 자살 기도까지 했고, 고향에 돌아와서도 위안부 생활을 숨긴 채 병든 몸을 견뎌야 했다.

문 할머니의 이러한 증언은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도 램지어 교수는 문 할머니를 마치 떼돈이라도 번 고급 매춘부인 양 묘사했다.

‘말단 연행자’ 문제로 초점 흐리기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과 당시 연합군의 포로 심문 기록 등 자료에 따르면, 피해자 대부분은 취업 사기와 폭력에 의해 연행됐다. 후자는 군인과 경찰이 수행한 경우가 많았고, 민간인에 의한 것은 극소수였다. 그런데 전자의 경우, 말단 연행자 중에는 민간인이 적잖았다.

이를 근거로 일본 정부와 우익은 강제 연행이 아니었다거나 강제 연행이 있었다 해도 일본 국가의 책임은 아니라고 말한다.

이 부분에서 함께 짚어 볼 수 있는 것은 《제국의 위안부》라는 책으로 알려져 있는 박유하 교수의 주장이다. 박유하 교수는 램지어 논문 논란이 일자, 자신이 램지어와 도매금으로 비판받는 것을 억울해 하고 있다.

램지어 교수의 주장이 일본 우익의 전통적인 주장이라면, 박유하 교수의 주장은 일본 내 자유주의 지식인들의 지지를

받는다. 그 핵심 내용인즉, 일본 국가에 책임이 있긴 한데 도덕적인 수준에서 사과하면 될 일이고, 법적 책임은 일본 국가가 아니라 말단에서 위안부를 모집한 민간업자들에게 있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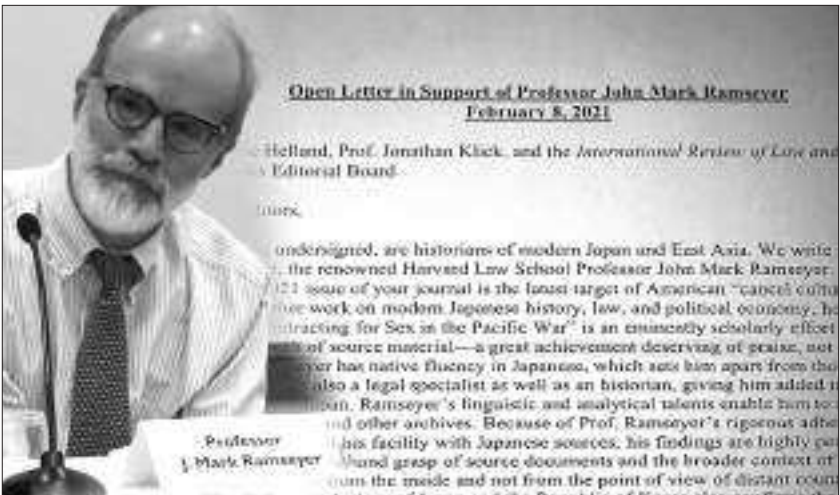
결국 램지어의 주장이든, 박유하의 주장이든 모두 말단 연행자의 존재에 사람들의 주의를 돌림으로써 일본 국가의 법적 책임을 부정한다.

그러나 1938년 일본군 문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모집 과정에서의 소요를 막기 위해 모집을 맡을 자의 선정에 신중을 기할 것.” 즉, 말단 연행자들이 민간인인 경우일지라도 그것은 군의 계획과 선정 하에 있었던 것이다.

더욱이 민간업자가 취업 사기로 끌고갔다 할지라도 결국 위안부 피해자들은 군이 관리하는 군용 트럭, 배, 기차를 타고 군이 운영하는 위안소에 보내져 군과 함께 끌려다니며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위안부’는 일본 육군성 주도 하에, 조선·일본·만주·대만·중국·필리핀에서부터 미얀마·인도·동티모르·파푸아뉴기니·미크로네시아(태평양 군도)에 이르기까지 일본 제국의 모든 점령지에 치밀하게 배치됐고, 위안소를 설립하기 어려운 지역에는 이동식 위안소를 만들어 여러 기지를 순회하기까지 했다.

일본의 조선총독부는 징용·징병 과정에서 애국반이라는 말단 조직에서 시작해 정동리·읍면·부군도·도연맹을 통해 중앙에 이르기까지 치밀한 동원 조직망을 갖고 있었다. 이런 조직망이 수십만 명 규모에 이르는 조선인 위안부를 동원하는 데서도 활용됐을 것이다.



램지어의 논문은 명확한 근거 없이 위안부 실상을 왜곡했다

위안부 제도의 기원

일본 제국은 1890년대부터 대만을 식민 지배했고, 1910년부터는 조선을 합병해 식민 지배했다. 1914년에 제1차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연합국 편에 가담해 산둥반도의 이권과 함께 만주·내몽골의 일부 지역을 조계지로 챙겼다. 이로써 일본은 아시아의 독보적인 강대국으로 급부상했다.

그러나 1920년대 말에 경제 상황이 나빠졌다. 세계경제 대불황의 짙은 암운이 드리웠던 것이다. 1930년 일본의 수출과 무역은 전년도에 견줘 각각 32퍼센트, 30퍼센트 폭락했다.

일본은 침략 전쟁의 확대로 위기를 타파하려 했다.

1931~1932년 일본은 만주를 침략해 경제적으로 수탈했고 이후 4개월 동안 일본 국토의 3배에 해당하는 중국 영토를 점령했다. 1937년 중일전쟁을 일으켰다. 일본군은 난징을 점령하고 30만 명을 학살하고 약탈, 방화와 더불어 수만 건의 강간 범죄를 저질렀다(난징 대학살). 그러나 이런 잔악 행위에도 불구하고 중일전쟁은 쉽게 끝나지 않는 장기전으로 이어졌다. 영토가 넓은 데다 무엇보다 중국 내에서 무장 저항이 계속됐던 것이다.

일본 병사들은 지치고 굶주리고 불만에 차다. 그럼에도 군은 병사들에게 충분한 식량과 물자, 병력을 제공할 수 없었다.

한편, 일본군은 광활해진 점령지에서 일부 군인들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벌이는 범죄를 통제해야 했다. 1938년 6월 중국에서 한 일본군 장교는 이렇게 쓰인 통첩을 발표했다. “각지에서 일본 군인들의 강간사건이 상상 외의 반일감정을 불러옴. 강간 사건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보복함. 이것은 치안유지와 군 전반의 작전행동을 저해하여 국가에 해로움을 가져오는 중대한 반역행위로 발생을 멸할 필요가 있음. 신속하게 성적 위안시설을 정비하는 것이 긴급함.”

이에 따라 지역마다 산발적으로 시행되던 일본군 위안소는 1937년 중일전쟁 발발과 함께 제2차세계대전 내내 체계적으로 운영됐다. 그리고 이 시기에 위안부 피해자의 수가 급증했던 것이다.

이런 역사적 배경을 이해한다면 위안부 문제의 본질이 자유계약도, 가부장제 문제도 아니라는 점도 이해할 수 있다. 위안부 문제는 일본 국가가 1930년대 후반부터 침략 전쟁의 확대와 원활한 수행을 위해 고안하고 수행하

고 관리했던 전쟁범죄이다. 그리고 그 범죄는 중일전쟁과 뒤이은 제2차세계대전이라는 비극 속의 비극이었다.

제국주의 반대

끝으로, 고전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에서 제국주의는 식민 지배나 민족 억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자본주의 세계 속에서 강대국들의 경제적·지정학적 경쟁과 그에 따라 형성되는 세계 질서를 의미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세계화된 경제적 경쟁, 특히 경제 위기 속에서 강대국들이 결국 경쟁과 싸움의 최종 심판을 군사력이라는 힘의 논리에 맡기게 된다.

바로 그러한 제국주의 질서가 옛 일본 제국 시절이나 일본이 군사대국화를 향해 박차를 가하고 있는 현재나, 양상만 달라졌을 뿐 근본적으로 여전하다. 일본이 위안부 문제를 집요하게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이유도 여기에서 찾아야 한다.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는 그러한 끔찍한 전쟁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하려면 제국주의 질서에 반대해야 한다는 것을 위안부 문제의 진실은 알려 준다.

3·1절 대통령 기념사

1년 반 전 항일 연사가 데마고기였음을 스스로 입증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3·1절 기념사는 문재인 정부 들어 일본에 가장 공손하고 나긋나긋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 배상 판결을 단호하게 외면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비판 없이 이렇게 말했다.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위해] 과거에 발목 잡혀 있을 수 없다. ... 우리 정부는 언제나 일본과 대화를 나눌 준비가 돼 있다.”

문재인은 한국과 일본이 얼마나 밀접한 사이가 됐는지도 강조했다. “일본의 성장은 한국에도 도움이 됐다. ... [양국 협력은] 한·미·일 3국 협력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손짓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대화하기 전에 “한국 쪽이 책임을 갖고 구체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경하게 나왔다. 한국 법원의 위안부·강제동원 피해 배상 판결에 대한 ‘해결책’(일본 정부가 배상을 피할 수 있는 대책)을 문재인 정부가 내놓아 한다고 압박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물밑에서 일본 정부와 외교적 ‘해법’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국 정부가 배상금을 대신 지급해 주고, 추후 일본 정부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이른바 대위 변제)을 제안했다고 한다.

그러나 위안부 피해자들이 바라 온 법적 배상을 우회하는 방안인 이상, 결국 기만적이었던 2015년 한일위안부합의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꼼수에 불과할 것이다.

과거사 문제로 일본에 항의하는 듯하다가도 결국은 한·일 관계 증진을 우선하는 행보는 역대 한국 정부들의 패턴이었다. 문재인이 그러하듯이 이는 한국과 일본의 지배계급들이 공유하는 경제·안보적 이해관계를 과거사 해결보다 중시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한·미·일 동맹 강화와 한·일 관계 개선을 요구하는 미국 바이든 정부에도 화답하고자 한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배상 판결을 받고도 외면당하고 램지어의 ‘위안부’ 모욕 논문으로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는 일본과의 관계 악화를 더 걱정하고 있다. 그리고 윤미향 전 정의연(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은 집권당 국회의원이다.



최영웅/서울신문

램지어 망언, 단지 일본 측의 로비 때문일까?

램지어 교수 외에도 미국 학계와 싱크탱크에 일본의 대외 정책에 우호적인 사람들이 꽤 있다. 언론은 그 배경에 일본의 막강한 로비가 있다는 사실을 예시한다. 미국이 한·일 갈등에서 일본에 더 우호적인 것은 일본 측의 로비 덕이라는 것이다.

램지어 교수의 공식 직함은 “일본법 연구 미쓰비시 교수”(미쓰비시의 기부금으로 만들어진 교수직)인데, 하버드대학교에 ‘삼성 교수’나 ‘현대차 교수’가 있었다면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겠느냐는 말도 나온다.

물론 로비가 일정한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 정부는 자신의 이익을 대변해 줄 일본역사학자들을 발굴하는 데 돈을 투자하고 있다.

그러나 좀 더 넓은 시야로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위안부 문제나 한일관계 문제에서 미국의 위치를 중립적인 제3국 정도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현재 문재인 정부의 외교부 장관이나 여성가족부 장관도 최근의 한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한 방안으로 미국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고 말한다.

미국의 구실

그러나 미국은 동맹인 한·일 양국이 화해하길 바라면서도 실전에서 한 번도 위안부 문제 해결에 진정으로 도움을 준 적이 없었다. 훨씬 더 중요한 동맹인 일본의 의사를 더 중시했기 때문이다. 196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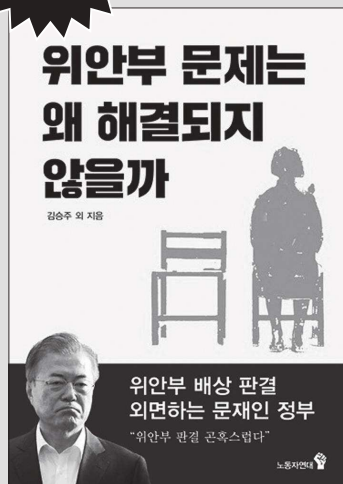
한일 청구권 협정과 2015년 한일위안부합의에서 모두 그랬다.

현재 미국의 바이든 정부는 한·미·일 동맹 강화를 매우 강조하고 있다. 경쟁국인 중국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견제하기 위함이다.

바이든 자신이 2015년 한일위안부합의 때 부통령으로 적극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 국무부에는 앤터니 블링컨, 웬디 셔먼 등 한일위안부합의 때 앞장섰던 인물들이 포진해 있다.

이것이 미국 정부와 주류 정치권의 분위기다. 램지어 교수 같은 자가 미국의 학계에서 대단한 존재인 양 용인된다는 것 또한 이런 맥락 속에서 봐야 할 것이다.

시간



위안부 배상 판결 외면하는 문재인 정부 위안부 문제는 왜 해결되지 않을까

김승주 외 지음, 노동자연대, 128쪽, 4,000원

문재인 정부는 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외면할까?
일본 국가와 우익의 역사 왜곡은 왜 계속될까?
위안부 문제는 왜 이토록 해결되지 않을까?

“위안부 판결 곤혹스럽다.”(1월 18일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잡권 초 위안부 문제 해결을 약속했던 문재인은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을 두고 곤혹스럽다면서 강제집행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안부 문제 해결보다 한일 관계가 우선이라는 것이다. 반일 제스처와 타협적인 대일관계를 왔다 갔다 하는 행보는 본질적으로 역대 한국 정부에서 계속 반복돼 온 패턴이었다. 그러는 와중에 위안부 피해를 부정하는 일본 국가와 우익들의 망언은 지속돼 왔다.

위안부 문제는 왜 이토록 해결되지 않을까?

이 소책자는 위안부 강제 동원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고 전후, 냉전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세계 질서의 변천 속에서 한일 과거사 문제가 왜 계속 해결되지 못했는지를 분석한다. 이때 일본과 한국의 지배계급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제국주의적 동맹 속에서 이해관계가 얽히고설키며 성장해 왔음을 지적한다.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운동 내 쟁점도 다룬다. 특히 지난해 5월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공개 비판하면서 시작된 윤미향·정의기억연대 논란을 돌아보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꼼꼼히 짚어 본다.

위안부 문제가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지를 치열하게 고민하는 독자들에게 중요한 길잡이가 될 소책자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10년

안전하고 평화적인 핵 에너지는 없다

장호중

2011년 3월 11일 저녁 국내 방송사들은 몇 시간 전 일본 도호쿠 지방을 덮친 지진해일(쓰나미) 영상을 송출하고 있었다. 거대한 해일에 속수무책으로 휩쓸려 가는 집과 자동차들, 육지로 떠밀려 온 대형 선박이 건물들과 충돌하는 장면은 할리우드 재난 영화를 무색하게 할 지경이었다. 2만여 명이 죽거나 실종되고 수천 명이 부상을 당했다.

늘 그렇듯이 엄청난 재난 앞에서 놀라울 정도로 신속히 대피하고 이웃의 생명을 구한 일본인들에 대한 보도가 이어졌다. 사고 지역에 있던 ‘후쿠시마 제1원전’(핵발전소)에 비상사태가 발생했다는 보도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랬다.

지진이 일어난 직후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1~3호기는 안전 장치에 의해 자동으로 정지됐다. 4호기는 점검을 위해 정지돼 있는 상태였다. 그런데 50분 뒤 지진해일이 발전소를 덮쳤다.

석탄이나 가스 등을 사용하는 화력발전소는 연료를 꾸준히 공급받아야 하지만, 핵발전소는 일단 연료를 장전하고 핵분열 반응이 시작되면 연쇄반응이 일어나 한동안 스스로 계속 열을 낸다.

그래서 핵발전소는 열을 발생시키는 것보다 그 열이 일정한 한계를 넘지 않도록 냉각시키는 것이 핵심적으로 중요한 과제다. 냉각 기능이 멈추면 반응로의 온도가 계속 높아져 결국 녹아내린다. 이날 지진해일은 여러 겹의 안전장치를 무력화하고 냉각장치를 완전히 마비시켰다.

냉각 장치

30시간 동안 냉각장치에 전력을 공급하려는 사투가 벌어졌지만 모두 실패했다. 매우 높은 방사선 유출 때문에 접근 자체가 어려웠다. 조기에 바닷물을 부어 반응로를 식히자는 제안이 있었지만 도쿄전력 고위 관료들이 거부했다. 정제되지 않은 바닷물을 부으면 발전소를 폐기해야 하기 때문이었다. 결국, 발전소 안에 찬 수소가 폭발해 발전소 지붕이 날아가는 영상이 전 세계로 송출됐다.

수소 폭발보다 더 심각한 일은 발전소 바닥에서 벌어지고 있었는데, 압력용기 바닥이 녹아 핵연료가 그 아래로 녹아내리고 있었던 것이다. 이른바 멜트다운이었다. 핵발전 연료인 우라늄은 매우 무거운 금속이라 주변을 녹이며 조금씩 아래로 내려갔다.

방사성 물질이 발전소 인근 지역에 대량 유출된 뒤에는 자동차를 탄 피난행렬과 석유를 구하려고 길게 늘어선 줄, 하얀 방호복을 입고 이재민의 몸에서 방사능을 측정하는 소방관들, 방사능에 오염돼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분리된 엄마와 아이, 피난길을 따라 높게 측정되는 방사선 등. 지금까지 어떤 재

난 영화도 그리지 못한 서늘한 장면들이 이어졌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는 체르노빌 사고와 함께 최고 등급(7등급)의 핵사고로 기록됐다. ‘안전한 핵발전’이라는 신화가 무너졌고, 〈파이낸셜 타임스〉는 ‘앞으로 20년 동안 핵산업은 암흑기에 놓일 것’이라고 보도했다.

당시 한국 정부는 국내의 신형 ‘가압경수로’가 후쿠시마의 구형 ‘비등 경수로’에 비해 훨씬 안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핵발전소의 원리상 구조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냉각장치가 정지하면 같은 처지에 놓인다. 냉각을 위한 복잡한 장치들은 사소한 실수나 부실 공사 등으로도 고장나기 쉽고, 방사성 물질이 새어나오면 접근하기도 어렵다. 고리·월성 핵발전소는 지진대 위에 놓여 있다.

10년 뒤

10년 사이에 이 발전소는 어떻게 됐을까? 조금 과장하면 10년 전 그대로다. 녹아내린 핵연료에서 핵분열이 계속되면서 열을 내고 있다. 이를 식히려고 바닷물을 들어붓고 있고 그 오염수가 계속 쌓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저장 시설 부족을 이유로 오염수를 해상에 방류할 계획을 세웠다.

강한 방사선 때문에 1~3호기의 압력용기에는 여전히 접근조차 못하고 있다. 무너져 가던 발전소 건물에 구조물을 설치해 추가 붕괴를 막은 게 고작이다.

각각의 발전소에는 사용후 핵연료를 보관하려고 만들어 둔 수조가 있다. 사용후 핵연료(연료봉)는 열과 방사선을 계속 내뿜기 때문에 물속에 보관한다. 상대적으로 작은 연료봉을 사용하는 월성 1호기의 경우에도 연료봉이 완전히 식으려면 6년가량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호기 수조에 있던 연료봉은 2014년에, 3호기 수조에 있던 연료봉은 올해 3월에서야 회수가 완료됐다. 그러나 여전히 1호기에는 392개, 2호기에는 615개의 사용후 핵연료봉이 남아 있다.

최근에는 2~3호기 건물 상층부에서 매우 강한 방사선이 측정됐다. 1시간만 노출돼도 사망할 정도로 강한 방사선인데, 압력용기 상부를 덮는 ‘실드 플러그’에 방사성 물질인 세슘이 들러붙은 것으로 추정된다. 세슘의 반감기는 30년이다. 이 방사선의 강도가 지금의 10퍼센트로 줄어들려면 100년쯤 걸린다는 뜻이다.

〈파이낸셜 타임스〉의 예상과 달리 핵산업은 암흑기에 놓이지 않았다. 핵발전의 신화가 무너지고 전 세계 곳곳에서 탈핵 시위가 벌어졌지만, 지배자들이 핵발전을 단념하도록 밀어붙이기는 역부족이었다. 한때 모두 정지됐던 일본 핵발전소는 2021년 2월 25일 기준으로 33기가 가동되고 있다. 전 세계 38개 나라에서 443개의 핵발전소가 가동되고 있고 51개가 건설 중이다.



폭발 이후 방사성 물질을 대량 배출하고 있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비슷한 사고는 앞으로도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왜 지배자들은 핵발전소 안 없애나

빌 게이츠는 최근 출판한 책 《빌 게이츠, 기후재앙을 피하는 법》(김영사)에서 기후 재앙을 피하려면 핵발전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태양광·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로는 인류가 필요로 하는 전력을 생산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이유다.

빌 게이츠 자신이 핵발전 기업 테라파워의 창립자라는 사실은 잠시 제쳐두더라도, 재생에너지에 대한 그의 비판은 순전히 기업주들의 관점에서 비롯된 것이다. 즉, 제아무리 잠재력이 커도 이윤을 충분히 얻을 수 없다면 누가 투자하겠느냐는 식이다.

그러나 각국 정부와 자본가들의 의구심에도 재생에너지의 기술적 잠재

력은 지난 수십 년 사이에 대단히 높아져 이제는 보수적인 국제에너지기구(IEA)도 경제성을 인정하고 있다.

문제는 그동안 만들어 놓은 어마어마한 양의 핵발전 설비에서 이윤을 얻고 있는 지배자들이 이를 폐기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이들이 각국 정부에 끼치는 지대한 영향력은 발전 정책에 거의 그대로 반영된다.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은 핵산업이 유지되는 데에 필수적이다. 미국에서 가동되는 핵발전소에 지급된 보조금은 발전 ‘원가’의 140퍼센트에 이른다(한국 한수원은 구체적이고 믿을 만한 발전 원가를 공개한 적이 없다). 그 덕분에 생산된 ‘값싼’ 전기는 제조업 자본가

들에게 매우 중요한 경쟁력을 제공한다.

경쟁하는 열강들도 핵산업의 유지를 바란다. 사용후 핵연료가 잠재적인 핵무기 원료이기 때문이다.

역대 한국 정부도 여러 차례 핵무기 개발을 위한 시험을 몰래하다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받은 바 있다. 문재인 정부는 아예 대놓고 핵잠수함 개발에 나섰다. 문재인인의 ‘탈핵’ 제스처조차 믿기 어려웠던 이유다.

핵무기와 방사능 위험에서 안전한 세계는 제국주의적 경쟁이 사라지고, 이윤을 위해 다른 모든 것을 희생시킬 준비가 돼 있는 자본주의 자체를 폐지할 때에만 가능할 것이다.

방사선 위험에 대한 거짓말들

월성 1호기 지하에서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예상치보다 높게 측정돼 논란이 됐다. 그러자 일부 과학자들은 해당 방사선 수치가 멀치 몇 마리, 바나나 몇 개가 방출하는 양과 비슷하며 별 문제 아니라고 일축했다.

그러나 어떤 물질이 내뿜는 방사선 양보다 살아 있는 세포가 실제로 노출되는 방사선 양이 중요하다. 어떤 물질이 방사선을 다량 방출해도 그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거나 잠깐만 노출되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덜 영향을 받을 것이다.

반대로 삼중수소가 체내에서 인체 조직과 결합되면 세포는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방사선에 노출된다. 어떤 방사성 물질은 금방 배출되는 반면 어떤

방사성 물질은 상당히 오래 인체에 남는다. 안타깝게도 이 ‘체내 피폭’ 문제는 충분히 연구되지 않았다. 실험이 어려울 뿐 아니라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가 이를 체계적으로 방해해 왔기 때문이다. 1959년 IAEA는 세계보건기구(WHO)와 협약을 체결했는데, 그 협약은 핵 발전과 핵무기 개발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 발표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이었다.(헬렌 칼디코트, 《원자력은 아니다》)

그래서 2005년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작성한 체르노빌 사고 보고서는 그 사고로 46명만 사망했다고 발표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미국 국립과학아카데미가 2006년에 발표한 보고서를 보

면 “방사선량과 암 발생률 사이에 비례 관계가 있다.” 이 보고서에는 특히 아주 적은 양의 방사선에 노출돼도 암 발생률이 비례적으로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백도명 교수 등은 1991년부터 2011년까지 20년 동안 핵발전소(월성) 주변에 거주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장기 연구 자료를 검토한 결과, 갑상선암이 “여성만이 아니라 남성에서도, 갑상선암만이 아니라 다른 방사선 관련 암에서도 증가하는 경향. 그리고 출생년도에 따라 구분했을 때, 뚜렷한 양-반응관계를 보였다”고 발표했다.(당시 이명박 정부는 같은 자료를 두고 방사선이 건강에 미친 영향을 확인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신울진 3·4호기 건설 불허 반복 ‘탈핵’ 제스처도 거둬들인 문재인

장호중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10주기(판권기사 8면)가 얼마남지 않은 지난 2월 22일, 문재인 정부는 신규 핵발전소 건설 중단 방침을 사실상 거둬들였다.

대선 때 내놓은 ‘탈핵’ 공약은 이미 누더기도 남지 않았다. 당시 건설 중이던 신고리 5·6호기는 기만적인 ‘공론화 위원회’를 거쳐 공사를 재개했다. 탈핵을 공약으로 내건 선거에서 수천만 명이 그에게 투표했으므로 공사를 중단할 정당성은 충분했다. 그런데 속고가 필요하다는 애써 불필요한 위원회를 만들더니 몇 차례 논쟁 뒤에 무작위로 선정된 공론화 위원 500명이 이를 결정하도록 했다. 정보력과 자원에서 비교가 안 되는 논쟁에서 정부와 핵산업계는 기회를 심본 활용해 다수표를 얻을 수 있었다.

2017년 고리 1호기 폐쇄는 박근혜 정부 시절에 결정된 것을 집행한 것일 뿐이다. 2019년 폐쇄된 월성 1호기도 수명이 오래 지나고 안전상 결함이 너무 드러나 폐쇄가 불가피했다.

물론 역대 정권들이 ‘수명 연장’이라는 핑계로 위험한 핵발전소를 계속 운영해 왔던 것보다는 나아 보일 수 있



10년 전 후쿠시마 사고의 교훈이 무색하게, 문재인이 ‘탈핵’은 온데간데없다

다. 그러나 거둬 드러나듯 이는 ‘탈핵’을 위해서가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명이 다 돼 문을 닫는 핵발전소가 늘어나자 핵발전소 폐쇄 산업에 진출할 준비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탈핵’, 즉 핵발전소의 완전한 운영 중단은 2080년이나 될 것이다. 설계 수명 60년짜리 신규 핵발전소가 지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체 누가 이런 것을 약속이라고 믿을 수 있겠는가.

다만 문재인 정부는 출범 당시 아직 착공을 하지 않았던 신울진 3·4호기 공사계획을 인가하지 않고는 ‘신규 원전을 더는 허가하지 않겠다’ 하고 밝혀

왔다. 스스로 ‘탈핵’ 정부라 주장하는 주요 근거 중 하나였다.

그런데 최근 한국수력원자력이 공사 계획 인가 시한을 2023년 12월로 연장해 달라고 요청하자 정부는 2월 22일에 이를 최종 승인했다. 신울진 3·4호기를 추가로 지을지 말지도 다음 정권에서 결정하라는 뜻이다. 수많은 환경엔지오들이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문재인이 핵심 지지층의 반발 가능성을 알면서도 이런 조치를 내린 것은 핵산업과 핵무기 보유에 대한 이 정권의 열망이 얼마나 큰지 보여 준다. 문재인 정부와는 독립적인 ‘탈핵’ 운동이 필요하다.

시리아 폭격, 이주 아동 구금 시설 재가동 바이든, 취임 한 달여 만에 본색 드러내다

소피 스카이어

미국 대통령 바이든은 제국주의와 인종차별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기대를 이미 산산조각 냈다.

바이든은 대(對)이란 재협상을 말하면서 이란과 연계된 단체들을 폭격했다.

2월 25일 바이든은 “이란한테 지원받는 시리아 동부의 무장 단체들”의 시설들을 공습하라고 지시했다. 22명이 목숨을 잃었다.

미국 국방부 대변인 존 커비는 언론에 이렇게 말했다. “[공습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우리는 중동에서 국익을 보호할 것이다.”

바이든은 2018년 사우디아라비아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의 암살을 왕세자 무함마드 빈살만이 승인했다는 기밀 문서를 공개했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는 빈살만을 제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국 국무장관 앤터니 블링컨은, 바이든의 바람은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긴밀한 관계를 “단절하는 게 아니라 재조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바이든도 트럼프와 마찬가지로 폭력을 동원하고 억압적 정권들을 지원해 중동 패권을 유지하려 함을 보여 준다.

공격

동시에 바이든은 이민자 공격도 이어가고 있다.

2월에 텍사스주(州) 커리조스프링스의 이민자 아동 구금 시설이 슬그머니 재가동됐다.

이 시설은 미국-멕시코 국경을 넘어 온 13~17세 아동 최대 700명을 가족과 분리 수용할 수 있다.

로지 아부아바는 텍사스주 샌안토니오 지역 활동가로, 2019년에 이 시설 폐쇄를 요구하는 시위에 참가했다가 체포됐었다.

아부아바는 이렇게 말했다. “바이든

이 상황을 개선하리라는 기대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이미 올해 초부터 미국 국경순찰대가 이주 아동 5800여 명을 보호자 동반 없이 구금했다는 보도가 있다.

바이든은 텍사스 구금 시설 운영이 “일시적 조치”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바이든은 팬데믹 기간 동안 아이들을 보호하려 구금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보호자와 분리 수용된 이민자 아이들을 변호해 온 샌안토니오의 이민자 전문 변호사 린다 브랜드밀러는, 이런 구금이 “불필요하고, 비용이 많이 들며, 바이든이 약속한 모든 것과 정면 배치된다”고 했다.

브랜드밀러는 “이는 엄청난 후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 대통령 트럼프가 바이든 취임 이후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트럼프는 보수정치행동회의(CAPC)에서 연설하며, 자신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이렇게 말했다. “4년 전 우리가 함께했던 놀라운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트럼프는 공화당 내에서 계속 우위를 점하려 노력하겠다고 했다. 선거 조작 때문에 11월 대선에서 패배했다는 거짓 주장도 되풀이했다.

트럼프는 2024년 대선 출마를 암시하며 이렇게 말했다. “다들 알다시피, 민주당은 사실 대선에서 패배했다. 하지만 누가 알겠나? 내가 세 번째로 저들을 꺾겠다고 결심할 수도 있다.”

트럼프는 이렇게 다짐하기도 했다. “우리는 횡행하는 급진주의·사회주의에 맞서 싸울 것이다.”

인종차별 반대 활동가들과 사회주의자들은 바이든의 정책과 트럼프주의의 위험 모두에 맞서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출처 영국의 혁명적 좌파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 2744호 번역 김지혜

삼성전자 특별배당

코로나 위기에도 총수 일가 배당금은 1조 원 이상

강동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빈부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와중에 삼성전자는 대규모 특별 배당을 한다고 발표했다. 일반 배당에 특별 배당까지 합치면 삼성전자의 2020년 배당금 총액은 20조 3381억 원에 이른다. 2019년보다 무려 10조 7188억 원이나 증가한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음식·숙박·관광·항공 등 서비스 산업은 큰 타격을 받았지만, 삼성전자 같은 가전·반도체 기업들은 호황을 누리고 있다. 2020년 삼성전자 영업이익은 36조 원으로 2019년보다 약 30퍼센트 증가했다.

삼성 총수 일가는 삼성전자의 배당금으로만 1조 원 이상(이전회 7462억 원, 이재용 1258억 원, 홍라희 1620억 원)을 챙기게 됐다. 2019년(4900억 원)보다 갑절 이상으로 늘어난 것이다.

물론 삼성전자가 배당을 대폭 늘린 것은 총수 일가의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총수 일가는 주식 상속세로만 5년간 11조 원 이상을 내야 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처럼 삼성 총수 일가가 배당을 늘려 산업 호황의 열매를 따먹고 손쉽게 삼성그룹 지배권을 유지하고 있지만, 삼성전자와 그 계열사 노동자들은 임금이 오르지 않아 불만을 토로하고 있

다. 동종업계의 SK, LG 노동자들도 오르지 않은 임금에 항의하고 있다.

미술품 사회 환원?

한편, 삼성 총수 일가는 자신들이 소유한 고가 미술품 1만 3000여 점을 기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정가 총액이 2조~3조 원이나 되는 미술품들을 기증해 이재용 석방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려고 하는 듯하다. 정치권과 주류 언론 일각에서는 미술품으로 세금을 낼 수 있게 허용하자며 삼성 총수 일가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고가 미술품은 부유층이 탈세와 비자금 세탁에 유용하게 사용해 온 품목이다. 김용철 변호사는 삼성이 차명계좌의 비자금으로 고가의 미술품을 사들여 자금을 세탁했다고 폭로한 바 있고, 실제 2008년 삼성 특검은 에버랜드 물품창고를 압수수색해 미술품 수천 점을 찾아내기도 했다. CJ그룹 이재현도 비자금 6200억 원을 조성하고 그중 1000억 원을 고가 미술품 구입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검찰 조사 결과 확인되기도 했다.

노동자들을 쥐어짜 조성한 비자금 등으로 구입한 고가 미술품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꼴을 보고 있으면,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누가 번다는 속담이 절로 떠오른다.

이처럼 코로나19와 경제 위기 속에

서도 일부 재벌 총수들은 더욱더 부를 쌓아 올리고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의 삶은 더 어려워지고 있다. 올해 1월에는 일자리가 100만 개가량 줄었다는 통계가 발표되기도 했다. 임시·일용직이 많은 소득 최하위층(1분위)은 지난해 4분기 근로소득 감소율이 13.2퍼센트나 돼 소득 분배 악화가 심상치 않음을 보여 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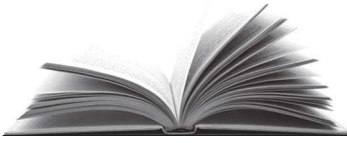
그러나 정부·여당과 보수 야당은 재난지원금 지급이나 공공부문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돈을 쓰는 데에는 매우 인색하다. 정부·여당은 자발적인 이익공유 등을 말하며 민심을 달래려 하지만, 기업주·부유층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둬들 생각은 없다.

한편, 이번 삼성전자의 대규모 특별 배당은 정부가 추진해 온 재벌 개혁이 허울뿐이었다는 점도 보여 줬다. 문재인 정부가 재벌 개혁을 하겠다며 재벌의 소유구조 개편, 소액주주 권한 강화 등을 추진했지만, 여전히 재벌 총수들이 자신들의 지배력을 이용해 부를 쌓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줬다. 역대 정부가 빠지지 않고 재벌 개혁을 추진했지만 언제나 용두사미로 끝나고 만 것도 마찬가지 이유 때문일 것이다.

위기의 시기에도 부를 독점하고 더욱더 부유해지는 재벌에 타격을 가하고 노동자·서민의 삶을 지키는 길은 노동자 투쟁을 발전시키는 것뿐이다.



바이든의 시리아 공습 지시는 이란을 향한 경고이기도 했다



서평 | 《계급이란 무엇인가?》

불평등의 핵심, 계급에 대한 이해를 돕고 오해를 풀다

최영준

자본주의가 만들어 내는 불평등과 지난 수십 년 동안 심화된 양극화로 많은 사람들이 이 사회가 평평하지 않다는 걸 잘 안다. 팬데믹 하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쪽도 가난한 사람들과 노동계급이다. 반면 많은 자본가들은 이 시기에 재산이 더 늘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 심지어 많은 좌파들도 갖가지 불평등의 원인을 이해하고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로서 계급에 주목하지 않는다.

이번에 출간된 《계급이란 무엇인가?》는 불평등의 진정한 원인을 이해하는 열쇠로서, 사회체제의 작동 원리 속에서 계급을 살펴본다. 무엇보다 계급에 대한 각종 표피적 접근과 혼란에서 벗어나 계급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한다.

저자 린지 저먼은 영국에서 오랫동안 혁명적 사회주의자로서 활동하며 계급투쟁 속에서 계급·여성해방·개혁주의 문제를 다룬 많은 글과 책을 써왔다. 난해한 학술 서적들과 달리, 이 책은 날카로운 폭로, 풍부한 역사적 사례, 다양한 쟁점을 담고 있고 마르크스주의의 접근법을 이해하기 쉽게 제시한다. 《오늘날 한국의 노동계급》(책갈피, 2017)의 저자 김하영은 추천사에서 “계급 문제를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쓴 쉽고 명쾌한 입문서”라고 했다. 게다가 누구나 쉽게 도전할 수 있는 분량이기도 하다.

노동계급의 혁명적 잠재력

상당수 진보·좌파들은 ‘노동자답게’ 행동하는 사람들이나 각성한 정치의식이 있는 노동자들이 진정한 노동계급이라고 본다. 하지만 “마르크스는 현재(있는 그대로)의 노동계급과 노동계급의 잠재력을 구별”했다. 린지 저먼은 “노동계급에 속한 누군가가 보수당에 투표하고 공영주택을 사거나 주식을 약간 소유하더라도 그는 여전히 노동자”라며 이 점을 놓치면 노동계급의 현재 의식에 낙담해 그들의 혁명적 잠재력을 부정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한다.

계급을 생산수단 지배 여부로 구분하지 않고 막스 베버처럼 다양한 경제적 요인으로 구분하거나, 사무·전문 기술직 노동자들을 노동자가 아닌 ‘신중간계급’으로 분류하는 관점도 널리 퍼져 있다.

이런 관점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급속 노동자와 교사·간호사를 하나의 계급으로 보지 않는다. 이처럼 계급을 소득, 지위, 직종,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잘게 나누기 시작하면 결국 노동계급이 사라지고 있다는 주장을 강화하고, 더는 이 사회를 양대 계급이 적대



파업 집회 중인 한진택배 노동자들 대공장 생산직 등 특정 부문만을 노동자라고 보면, 노동계급의 구성 변화를 노동계급의 쇠퇴로 잘못 볼 수 있다. 그러나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 새롭게 등장한 부문도 노동계급의 일부이고, 착취에 맞설 잠재력이 있음을 거듭 보여주고 있다.



계급이란 무엇인가

린지 저먼 지음, 책갈피, 176쪽, 12,000원

하는 사회로 보지 않게 된다.

반면 저자는 이런 피상적 구분을 거부하며, 착취 관계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에 따라 계급을 구분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 착취 관계 속에서 발휘되는 노동계급의 집단적 힘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마르크스는 “노동계급이 집단행동을 통해 생산수단을 장악하고 사유재산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사회적 생산을 조직하는 사회를 확립”할 특별한 존재라고 봤다.

자본주의 역사 속에서 노동계급은 이런 집단적 힘으로 특별한 구실을 할 수 있음을 여러 차례 보여 줬다.

한편, 이 책은 1996년 영국에서 처음 출판된 책임에도 현재 한국 노동운동 안에서 유행처럼 제기돼 온 주요 쟁

점들, ‘제조업 육체 노동자들이 쇠퇴했는가’, ‘서비스 노동자 증가로 노동계급이 약화했는가’, ‘비정규직 증가로 노동계급이 분절되고 이질화됐는가’, ‘비정규직이 무한정 늘어나고 있는가’ 등에 답하고 있다. 20년 전 영국의 구체적 현실에 관한 자료와 사례들을 이용했음에도 시대에 뒤처지기는커녕 오히려 요즘 한국 상황에 딱 들어맞는다.

노동계급은 자본주의 생산의 변화와 함께 변해 왔다. 20세기 후반 서비스 산업의 폭발적 성장과 고용 확대, 사무직 노동자와 여성 노동자의 증가로 노동계급의 구성이 변해 왔다. 그러나 노동계급의 구성 변화를 노동계급의 종말로 보는 것은 단견이다. 저자는 비정규 노동(유연 노동)도 증가했지

만 이것을 과장해선 안 된다는 것을 역사적 사례와 통계 등으로 입증한다. 이 책의 편집자는 최신 통계를 병기했는데, 이를 보면 놀랍게도 저자가 20년 전에 진단한 추세가 현재에도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본가 계급을 다룬 부분도 무척 흥미롭다. 저자는 자본가 계급을 생산수단 소유 여부뿐 아니라 기업을 관리·경영하는 사람들, 자본가 계급을 대신해 자본가 계급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는 모든 국가 기구의 고위 관료, 직업 정치인 등도 자본가 계급으로 규정한다. 이들은 서로 경쟁하지만 착취에서는 모두 동일한 이해관계를 갖는다. 하지만 저자는 자본가 계급이 서로 경쟁하기에 분열이 벌어지고, 노동계급이 이를 이용해 단결해 싸운다면 결정적 승리를 얻을 수 있다고 역설한다.

이 책은 양대 계급(자본가 계급과 노동계급) 사이에 낀 중간계급도 다룬다. 중간계급은 현대 사회에서 계급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이기도 하다. 상당수 좌파들은 자본주의가 변화하면서 점점 중간계급이 양산된다고 착각한다.

하지만 이 책은 ‘신중간계급’으로 분류되는 전문직·기술직·관리직 종사자 중 많은 수가 프롤레타리아화해 왔음을 보여 준다. 중간계급은 단일하지 않고 양대 계급 사이에 낀 샌드위치 신세에 더 단호한 쪽을 따르게 된다. 중간계급의 이런 특징을 잘 이해한다면 노동자운동이 어떻게 중간계급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지, 중간계급과 노동계급의 차이를 흐리는 민중주의 전략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잘 알 수 있다.

혁명적 정당

노동자는 자본주의 이윤 시스템과 사용자들이 가하는 압력 때문에 집단적 투쟁으로 떠밀리고 바로 이런 투쟁 속에서 관념이 바뀌고 사상이 발전한다. 한국 노동계급도 1987년 7~8월 대중파업뿐 아니라 지난 30년간 여러 집단적 투쟁 속에 의식과 조직을 성장시켰다. 노동조합은 그런 의식과 조직 발전의 산물이다.

이 책은 여기서 설명을 멈추지 않고 노동조합 투쟁을 통한 의식 변화에는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는 노동조합의 한계에서 비롯한다. 노동조합은 착취 자체가 아니라 그 결과물을 놓고 싸운다. 그래서 노동조합 지도자들은 조합원들의 요구만이 아니라 사측의 사정도 살펴야 한다는 압력을 받는다. 많은 투쟁에서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불가피하지 않은데도 양보와 타협을 하는데 기층 노동자들도 이를 뛰어넘지 못하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노동계급의 혁명적 잠재력과 실제 현실 사이의 모순을 극복하려면 노동조합에서 더 나아가 혁명적 정당이 필요하다. 혁명적 정당은 노동계급 운동에 뿌리내리고 노동계급의 가장 선진적인 부위와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한다. 혁명적 정당은 운동 내에서 토론과 논쟁을 통해, 과거의 투쟁과 전통에서 발전시킨 이론과 사상을 전하는 동시에, 끊임없이 변화·발전하고 새로운 조직과 투쟁 형태를 만들어 내는 노동계급에게 배우기도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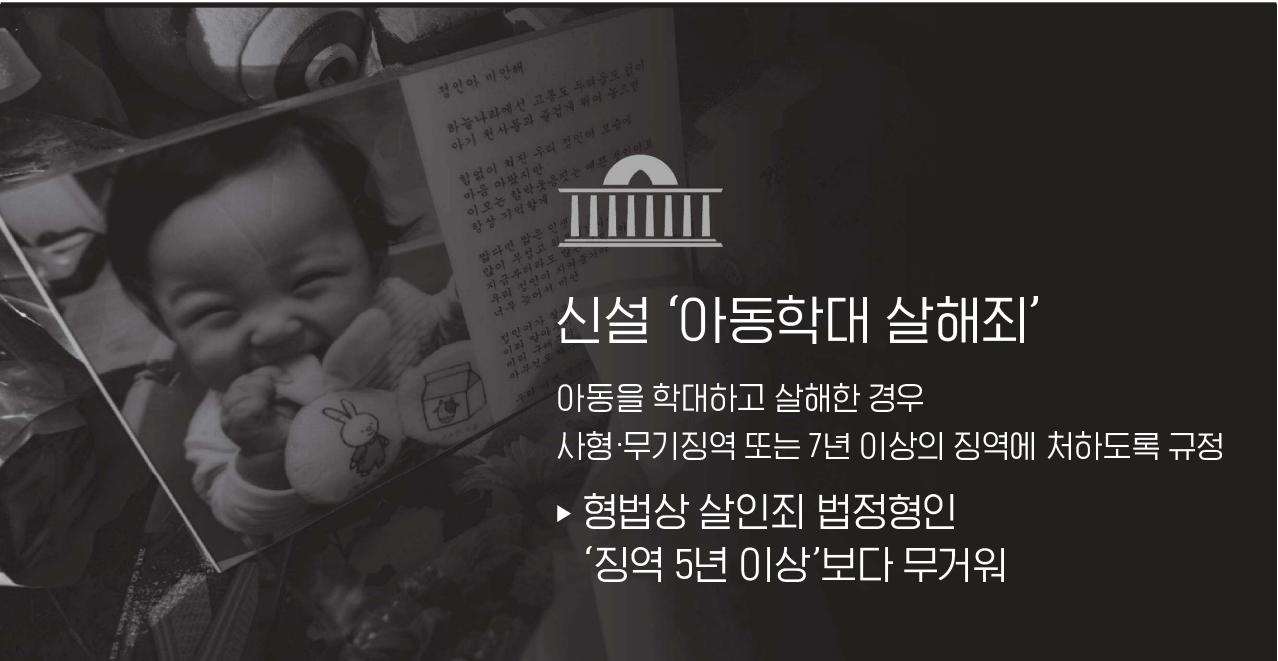
이 책은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계급 문제를 보려 할 때 아주 유용한 입문서다. 입문서라고 해서 깊이가 없을 것이란 선입견은 버려라. 계급 문제에 대한 최신 논쟁까지 다루기에 경험 있는 활동가들도 꼭 읽어 봐야 할 필독서다. 이 책과 함께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한국의 노동계급을 분석한 《오늘날 한국의 노동계급》도 추천한다.

더 읽어 보면 좋은 책



오늘날 한국의 노동계급
고전적 마르크스주의의 관점

김하영 지음, 책갈피, 456쪽, 16,000원



2월 26일, '아동학대 살해죄'가 신설된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도덕적 공포와 형사처벌 강화로 아동학대 줄지 않는다

정진희

최근 몇 달 간 몇몇 충격적인 아동학대 사건들이 보도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커다란 슬픔과 분노에 빠졌다.

하지만 주류 언론들과 정치인들은 아동학대를 줄일 진정한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도덕적 공포 부추기기에 여념이 없다. 그리고 개별 가해자를 악마화하는 데 치중하며 처벌 강화를 요구해 왔다.

주류 정치인들도 마찬가지다. 양천 아동학대 사망 사건(정인이 사건)과 경찰의 안이한 대처에 공분이 일자,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주류 정당들은 처벌 강화와 신상 공개 방안이 담긴 법안들을 경쟁하듯 내놓았다. 특히 4월 재보선을 앞두고 그들은 처벌 강화책을 신속히 처리하고 있다.

2월 26일 통과된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안에는 '아동학대 살해죄'가 신설됐다. 학대로 아동을 숨지게 하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살인죄(사형·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나 현행 아동학대 치사죄(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보다 법정 형량이 높아진 것이다.

그러나 덮어놓고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아동학대의 진정한 대책은 되지 못한다. 아동학대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주류 언론들과 정당들이 처벌 강화책을 내놔고, 그에 따라 법이 개정돼 왔다. 2013년 울산 아동학대 사망 사건 등이 일어나면서 2014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돼 처벌이 강화됐다.

하지만 그 뒤 아동학대가 줄어드는 조짐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한국보다 아동학대 처벌 수위가 높은 미국 등지

에서도 아동학대는 줄지 않았다.

물론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면서 신고 건수가 계속 늘었고 학대 인정 건수도 늘었다.

불평등

불평등이 심하고 빈곤과 아동 복지에 돈을 적게 쓰는 나라일수록 아동학대가 많이 일어난다. 아동학대는 부와 권력이 소수에게 집중된 자본주의 체제에 원인을 두고 있고, 가족 제도가 사회 체제에서 하는 구실이 특히 큰 영향을 끼친다(본지 353호, '아동학대와 자본주의').

따라서 복지를 크게 늘리며 빈곤과 불평등을 줄이는 것이 실질적 효과를 내는 대책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와 보수 야당들은 모두 이런 대책을 한사코 추구하지 않는다. 불황이 깊어지면서 해고를 더 쉽게 하고 임금 등의 비용을 줄이려는 사용자들과 그들의 정치인들은 복지비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려 한다.

문재인 정부가 1월 19일 발표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방안'에도 아동학대 예방에 중요한 가정·아동 복지 확충 계획은 쏙 빠졌다. 아동학대 피해자 지원마저 미흡하기 짝이 없다(본지 354호, '피해 아동 지원에조차 여전히 인색한 정부').

국민의힘도 별로 다르지 않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나 지금이나 그들은 미봉책을 내놓으며 처벌 강화에 주력한다.

스포츠 스타와 연예인들을 상대로 터져나오는 '학교폭력' 폭로에 대해서도 주류 정치권은 근본 대책 없이 덮어놓고 처벌 강화만 외치고 있다.

물론 청소년기에 당한 학교폭력은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남길 수 있다.

그러나 지독한 경쟁과 소외, 통제 위주의 교육·훈련 시스템 등 본질적인 문제는 놔둔 채 가해자 처벌만 강조하는 것은 한계가 너무 크다.

게다가 언론의 선정적인 보도 홍수 속에 사실 확인조차 없이 보도되다 보니, 그중에서는 진상이 불분명한 것도 많은 듯하다.

지배계급은 언제나 범죄를 사악한 개인들의 문제로만 몰며 문제의 근원을 감추고 왜곡한다. 빈곤과 불평등, 소외가 만연한 자본주의 체제의 본질을 가리며 대중의 불만이 지배계급을 향하지 않게 하고, 대중의 불안과 공포심을 자극해 국가(특히 경찰)의 권위를 강화하는 데 이용한다.

그러나 도덕적 공포와 처벌 강화로 아동 보호가 실제로 강화되지는 못한다. 자본주의 사회는 불평등이 심각하고, 양육을 대부분 개별 가정이 떠맡도록 강제되고, 온갖 차별이 난무하며 실패가 개인 탓으로 돌려진다. 아동은 이런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처지에 있으므로 손쉬운 희생양이 되기 쉽다.

불황으로 실업이 늘고 임금이 삭감되고 복지가 축소되면 대중의 처지가 악화돼 아동이 입는 피해는 더 커진다. 아동학대를 줄려면 빈곤을 줄이고 복지를 대폭 늘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하다.

나아가 아동학대를 뿌리 뽑으려면, 불평등과 경쟁으로 절망과 좌절을 낳고 인간성을 왜곡시키는 자본주의 체제가 제거돼야 한다.

이를 위해, 대중의 조건을 개선하고 자신감과 의식을 높이며 사회 자체를 바꿀 수 있는 노동계급의 투쟁이 성장해야 한다.

<노동자 연대> 기본입장

우리는 마르크스주의 전통을 이어 가고자 한다. 이 전통은 처음에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시작했고, 레닌·룩셈부르크·트로츠키가 물려받아 전해 준 전통이다.

이 전통에 따르면, 전쟁·빈곤·기아·착취·차별·환경파괴 등은 자본주의 때문에 생겨나는 일이다. 난민·기후 위기·팬데믹 등도 마찬가지다. 대안은 사회주의 사회이다. 사회주의는 노동자들이 생산수단을 지배하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놓고 민주적으로 계획하는 시스템(이하 체제)이자 이를 구축하기 위한 운동과 사상이다.

소련의 경험은 노동자 혁명이 한 나라에 고립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음을 보여준다. 소련 고립의 결과는 사회주의가 아니라 국가자본주의였다. 그 뒤 동유럽과 북한, 중국에서 스탈린주의 정당들이 소련과 비슷한 체제를 건설했다. 우리는 북한과 중국의 노동자들이 국가자본주의와 시장에 맞서 싸우는 투쟁을 지지한다.

아래로부터의 사회주의

노동계급은 사회의 부(富)를 창출하는데도 그 생산 수단과 방법을 통제하지 못한다. 사회주의는 노동자 권력이고 노동계급의 자력 해방이다. 오직 노동계급 자신의 대규모 투쟁으로써만 차별과 착취로 점철된 체제를 끝낼 수 있다.

노동계급은 사회의 다수이고 사회주의 운동의 주축이다. 노동자들이 생산에서 하는 핵심적 구실 덕분에 그들은 다른 사회세력과 달리, 생산을 멈춰 자본주의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그들 존재 조건의 집단성 덕분에 노동자들은 생산 수단과 생산 방식을 집단적으로 조직해 새 사회의 토대를 놓을 수 있다.

개혁만으로 충분치 못하고 혁명이 필요하다

우리는 노동자와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의 개혁 투쟁을 지지한다. 조건을 지킬 수 있고, 자신감과 투쟁력을 강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의 개혁은 차별과 착취, 기후 위기 같은 환경 재앙을 끝내지 못한다. 자본주의는 환경을 체계적으로 파괴한다. 차별과 착취, 환경 재앙이 사라지려면 새 사회가 건설돼야 한다.

그러나 의회를 통해 새 사회로 가는 길은 없다. 지금의 의회·군대·경찰·사법기구를 노동계급이 인수해서 사용할 수 없다. 그런 기구들은 자본주의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져 발전했고, 노동계급과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에 맞서 지배계급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설계돼 있다. 지금의 체제는 수리하거나 개혁할 수 없고, 해체되고 없어져야 한다.

노동계급에게는 전혀 다른 종류의 국가가 필요하다. 노동자들이 선출한 대표자들로 이뤄진 노동자 평의회를 기반으로 한 노동자 국가가 그것이다.

의회 활동은 기껏해야 현 체제를 반대하는 선전에 쓸모 있을 뿐이다. 물론 우리는 공직선거에서 자본가 정당의 후보가 아니라 진보·좌파 후보를 지지한다. 또한 자본가 정당들의 공식 정치 지배로부터 독립을 촉진하는 정치 활동을 지지한다. 그러나 지금의 체제를 없앨 수 있는 것은 노동자들 자신의 대규모 행동뿐이다.

국제주의

자본주의는 세계 체제이고, 세계 노동계급은 전쟁, 기아, 기후 위기, 팬데믹 같은 국제적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유일한 사회세력이다. 따라서 사회주의 운동은 국제적이어야 하고 만국의 노동자를 단결시켜야 한다. 역사를 보면, 외교라는 수단을 통해 제국주의간 갈등을 해결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그 대신 다른 나라 노동

자들과 연대해야 한다. 반대로 한 나라의 노동자들을 다른 나라의 노동자들과 대립시키는 것 일체를 반대해야 한다.

우리는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열강의 세계 지배와 이를 위한 그들의 각축과 전쟁을 반대한다. 그러므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서 어느 편도 지지하지 않는다. 북한 핵무기는 미국이 동아시아 지역 패권을 유지하는 데 이용하는 핑계일 뿐이고, 진정한 쟁점과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 등 서방의 북한 간섭과 압박을 반대한다.

우리는 제국주의 하에서 억압받는 민족들의 자결권을 지지한다. 또한 민족자결에 반해 제국주의에 의해 분단된 한민족의 재통일을 지지한다. 남북한의 주민은 자신이 적합하다고 여기는 방식으로 통일할 권리가 있다.

평등과 해방

자본주의는 민족, 인종, 젠더, 섹슈얼리티, 고용형태(정규직 / 비정규직), 그 밖의 다른 차이들로 노동계급을 분열시킨다. 우리는 여성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 평등을 지지한다. 우리는 여성이 낙태를 선택할 권리를 전적으로 지지한다. 우리는 성소수자 차별과 천대를 반대한다.

우리는 인종차별을 반대하고 이주민과 난민, 탈북민 유입 억제제를 반대한다. 특히, 우리는 거짓에 근거해 비난받고 있는 무슬림에 대한 천대와 혐오를 반대한다.

우리는 이주민과 난민, 탈북민 등 차별과 천대를 받는 집단 모두가 권리를 누리기 위해 조직하는 것을 지지한다.

우리는 국가보안법에 의한 시민적·정치적 권리 제한을 반대한다.

갖가지 형태의 차별에 반대하는 민주주의적 투쟁은 사회주의적 투쟁의 필수 불가결한 부분인 한편, 노동자 권력(사회주의) 없이는 차별로부터의 해방(민주주의)이 불가능하다.

노동조합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경제적·정치적 조건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없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민주적이고 전투적이며 계급투쟁적인 노동조합 운동을 지지하며, 계급협력주의를 거부한다. 또한 우리는 정치적 노동조합 운동을 지지한다. 즉, 노동조합 운동은 차별과 부당함에 반대하는 투쟁 일체를 옹호해야 한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착취 자체를 반대하지 않고 착취의 결과에 저항하는 조직이다. 그래서 노조 지도층의 역할은 사용자와 협상하는 것이지, 자본주의를 끝내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싸울 땐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이 노동자들을 배신하면 그들에게서 독립적으로 투쟁할 수 있도록 현장 기반 운동이 건설돼야 한다.

혁명적 당

노동자 혁명이 성공하려면 노동계급의 가장 선진적인 부분이 혁명적 당으로 조직돼야 한다. 그런 정당은 노동계급과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의 일상적 저항 조직들 안에서 활동함으로써만 건설될 수 있다. 노동조합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혁명적 조직이 별도로 필요하다.

운동 내의 비혁명적 경향을 그저 비난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개혁주의 지도자들과의 공동 활동을 통해 다른 노동자들에게 사회주의 정치가 당면 투쟁과 무관하지 않음을 실제로 입증해야 한다. 공동전선을 통해 혁명적 사상과 실천의 우수함을 모든 노동자들에게 종파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보여 줘야 한다.

우리는 이런 당의 초석을 놓으려 무진애를 쓰고 있다. 위에서 설명된 우리의 기본 입장이 대체로 수긍되면 우리와 함께합시다.

노동자연대 단체에서 가입을 받습니다

위기의 자본주의, 좌파적 대안을 제시하는

노동자연대에 가입하세요!

workerssolidarity.org

※ 웹사이트에서도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소속

회비약정액

□ 2만 원

□ 3만 원

□ 4만 원

□ 5만 원

□ 기타 () 원

(회비 기준액은 월 2만 원 이상, 단 대학생은 1만 원 청소년 이주노동자 5천 원 이상)

※ 본인은 위의 정보를 노동자연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입 신청일: 년 월 일 (서명)

작성 후 사진을 찍어 보내 주시면, 확인 후 연락 드리겠습니다. 010-4909-2026, mail@workerssolidarity.org

※ 2021년 2월 27일 개정



미얀마 투쟁 정당방위 무장을 해야

유리 프라사드

미얀마가 군사 정권과 민주주의 시위대 사이의 맹렬한 전투에 휩싸였다. 지난주 온라인에 올라온 영상과 사진을 보면, 최루탄과 실탄을 퍼붓는 경찰에 맞서 시위대가 즉석에서 바리케이드를 쳤다. 자욱한 연기 속에서 한 무리의 청년들이 사상자들을 사격 지대에서 끌어내려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청년들은 방어선으로 날아온 최루탄을 되던졌다. 손에 잡히는 것은 무엇이든 던졌다. 시위대가 가장 많이 사망한 날에는, 미얀마 최대 도시 양곤과 남부 소도시 다웨이

이에서 진압 부대의 손에 시위 참가자가 최소 18명이 죽고 30명이 다쳤다. 경찰은 최루탄과 물대포뿐 아니라 실탄까지 발사했다. 이번 공격은 민주주의 투쟁에 대한 탄압의 일부다. 이 투쟁은 지난 2월 군부가 권력을 되찾으려 쿠데타를 벌인 것을 규탄하며 분출했다. 손에 피를 묻힌 미얀마 통치자들은 전투 와중에 국영TV를 통해 앞으로 거의 모든 노동조합 활동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발표는 지난주 큰 성공을 거둔 총파업에 뒤따른 것이다. 2월 22일에 수많은 사람들이 일손을 놓고 일터에서 나와 온 나라를 마비시켰다.

은행과 공공 서비스 노동자들은 금융 부문을 일부 마비시켰다. 여성이 압도적인 의류 제조업 노동자들을 따라 석유·천연가스 노동자들도 거리로 나섰다. 보건의료 노동자들도 저항의 선두에 섰는데, 이제 그들은 정권의 표적이 됐다. 심지어 원로 의사들조차 병원에서 해고되고 있다. 현재 많은 파업 지도자들이 탄압을 피해 도망 다니고 있다. 미얀마노동자총연맹(FGWM) 지도자 모이 산다 민은 은신 중이다. 정부 당국은 시위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을 이끌었다는 이유로 그녀를 체포하려 했다. 양곤의 흘라잉타야 지역 봉제공장

노동조합의 한 지도자는 공장 노동자들이 경찰의 추격을 피해 숨바꼭질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녀는 노동자들이 밤마다 다른 곳에서 잠을 자고 매일 시위에 나서고 있다고 했다. 시위대의 끈기는 대단히 놀랍다. 1988년, 2007년 시위에서 군부가 자신들의 통치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학살했던 역사를 떠올려 본다면 더욱 그렇다. 그러나 운동이 분쇄되지 않으려면 지금 반드시 군부로부터 주도권을 되찾을 싸움을 벌여야 한다. 새로운 무기한 총파업은 경제 전체를 마비시키고 군 장성들을 더 압박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까지 민주주의 투쟁 참가자들은 (지난 역사를 염두에 두고) 한사코 투쟁을 평화적으로 한정하려 해 왔다. 이제 운동은 끔찍한 국가 폭력에 맞서 스스로 방어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민중은 거리에서 쫓겨나고 군대는 계속 권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영국의 혁명적 좌파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 2744호 / 번역 강미령

관련 온라인 기사

"국제 사회" 개입이 미얀마 항쟁에 도움 될까?

wspaper.org/d/25267



최루탄 연기가 자욱한 가운데 경찰과 시위대가 난투극을 벌이고 있다. 3월 3일 미얀마 만달레이

사진 출처: Myanmar Now

잇따른 택배 노동자 승리 한진택배 노동자들, 점거 파업으로 해고를 막다

신정환

최근 택배 노동자들이 해고에 항의해 파업을 벌여 통쾌한 승리를 거뒀다. 며칠 전에는 CJ대한통운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여 해고자 복직을 얻어냈고, 서울 노원·양천 등에서 분류 인력 총원 확충을 약속받았다.(본지 357호 기사 'CJ 택배 노동자들, 파업 확대로 해고자 복직을 얻어 내다') 한진택배 노동자들(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조)은 전면 파업 돌입 8일 만(한진그룹 본사 로비 점거농성 6일 만)인 3월 2일에 해고 조합원 전원 복직을 쟁취했다. 한진택배 사측은 김천 대리점 분구 과정에서 면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등으로 조합원 고용 승계를 하지 않았고, 거제에서는 조합원 1명을 해고했다. 2월 23일 한진택배 전체 조합원 287명이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가자, 사측은 울산과 김천, 거제, 경기도 광주·이천·성남·고양 등 파업 지역들에서 택배 접수를 중단하며 강경한 태도로 나왔다. 비조합원들도 일을 하지 못하게 해 파업 노동



한진택배 노동자들이 생애 첫 파업으로 기세 좋게 사측을 밀어붙였다

자들과의 갈등을 부추기려는 의도였을 것이다. 한진 택배기사(8500여 명) 중 조합원은 300명이 채 안 돼, 이간질하기 쉬운 것이라고 본 것이다. 그러나 사측의 예상과 달리 노동자들은 한진그룹 본사 로비를 점거하며 파업을 지속했고, 이 소식은 대부분의 언론들이 보도해 널리 알려졌다. 지역 곳곳에서도 파업 참가자들이 모여 농성을 이어 가며 파업 대열을 사수했다. 일주일이 넘어도 기대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자 오히려 한진택배 사측의 손실이 계속 커지는 상황이 됐다. 일부

화주들은 아예 택배사를 변경하려고도 했다. 한진그룹의 종합물류계열사인 (주)한진에서 전체 매출 중 51퍼센트를 차지하는 택배 부문에서 손실이 불어나는 것을 망상 두고 볼 수 없는 처지인 것이다. 게다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택배 노동자 과로사를 비롯한 열악하고 부당한 처우가 불거지는 것도 한진 사측에게는 정치적으로 부담이 됐을 것이다. 결국 사측은 해고자 원직 복직을 수용했다. 뿐만 아니라 김천대리점 조합

원들은 휴게실 보장, 화장실 추가 설치(남녀 화장실 분리) 등 환경 개선 약속도 받아냈다. "전원 복직을 이뤄내 100퍼센트 승리입니다. 조합원은 287명인데 이탈 없이 푼푼 뭉쳐 투쟁한 것이 원동력이었습니다. 본사 로비 농성단이 꾸려진 건 택배노조 사상 처음이었구요. 아마 원정에서는 우리들을 쳐 내면 [앞으로 추가] 지회 설립을 못 할 것이라고 본 것 같아요. 저희는 여기서 물러서면 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합의 후에 로비에서 서로 열싸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태화 전국택배노조 김천지회장)

잇따른 승리

최근 잇따른 택배 노동자들의 저항은, 과로사 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한 달이 지나도록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과 분노가 상당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인력 총원과 일방적 계약 해지 금지 등 합의가 현장에선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노동자들은 그간 인력 총원과 조건 개선 투쟁에서 성과를 거두고 노조가 확대되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다시 투

쟁에 나섰다. 한진 택배에서도 노동자들은 지난해에 노조를 만든 후 벌인 생애 첫 파업을 기세 좋게 벌였다. 파업으로 임금이 주는 상황에서도 이탈자 없이 단단하게 대오를 유지했다. 파업 기간에 기흥과 평택에서 지회를 건설하는 등 조직 확대도 계속되고 있다. 노동자들은 이번 싸움이 더 큰 투쟁을 앞둔 기싸움이었다고 여긴다. 대리점이 택배기사들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임금)의 정확한 내역 공개(임금 인상을 위한 근거 마련), 임금을 갇아먹는 부당한 패널티제 폐지, 분류 인력 추가 투입 등 관찰시켜야 할 굵직한 요구들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번 투쟁에서 노동자들이 기세 좋게 사측을 밀어붙인 덕분에, 다음 투쟁을 유리하게 할 수 있게 됐다. 택배시장 경쟁이 격화하면서, 사측은 분류 인력 투입과 설비 개선, 부지 확충 등이 적잖은 비용이 발생하는 일이라 더 밀려선 안 된다고 여긴다. 앞으로도 인력 총원을 현장에서 관찰시키고 처우도 개선하려면 현장 노동자들의 투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